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

2021. 10.

사법정책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요약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찬성 11인¹⁾)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

- 원칙적으로 소가 기준으로 합의관할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합의관할 소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9인 / 반대 2인)
 - 위 방안에 반대하는 2인은 민사 제1심을 원칙적으로 전면 단독화하고, 사건의 난이도나 중요성 등 질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사건만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지지함(원칙적 소가 기준의 폐기 및 질적 분류 기준의 도입)
 - 장기적으로, 위와 같은 질적 분류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10인 / 반대 1인)
- 적정한 합의관할 소가 기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합의관할 소가 기준 | 찬성 위원 수 |
|------------|---------|
| 3억 원 초과 | 3인 |
| 4억 원 초과 | 2인 |
| 5억 원 초과 | 6인 |

- 소가 기준 상향과는 별도로, 일부 단순 유형의 사건(대여금청구 사건,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1) 최익구 위원: 보완방안 마련을 전제로 찬성.



일치하였음(찬성 11인)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수단

-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을 갖추어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이 찬성하였음(찬성 11인)
- 단독사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10인 / 반대 1인)
 - 당사자들의 이송신청에 재정결정부가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이 반대하였음(반대 11인)
 - 이송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제1회 변론기일 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10인 / 반대 1인)
 - 이송신청권 인정 대상 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예: 일정 소가 이상)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반대하였음(찬성 2인 / 반대 9인)
 - 재정결정부에의 기록 회부 여부에 대한 단독판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 다수가 반대하였음(찬성 4인 / 반대 7인)
-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대신 소액사건 관할 기준 금액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대립하였음(찬성 6인 / 반대 5인)
- 그 밖에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법정언행컨설팅 또는 동료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 모니터링 의무화,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제도화 등 기타 보완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

■ 제1심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 조정

- 합의관할 소가 기준 상향으로 단독사건이 되는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을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담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이 찬성하였음(찬성 11명)
- 장기적으로, 항소심을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관한 문제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기준에 관한 법원별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10인 / 반대 1인)
- 일부 법원에 대한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범실시 없이 전국 법원에 대해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이 찬성하였음(찬성 11인)
-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이 확대되더라도, 단독사건에 관한 비변호사 소송 대리 허용 범위는 축소 또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이 찬성하였음(찬성 11인)
- 장기적 방안으로 사물관할의 질적 분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 사물관할 기준 개정에 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 6인 / 반대 5인

■ 시행시기

- 법관, 참여관 및 실무관 등의 인력 배치 문제, 법정 및 조정실 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분과위원회 진행 개요

가. 회의 경과

- 제7차 회의: 2020. 11. 9. 14:30~16:15
- 제8차 회의(원격영상회의): 2020. 12. 14. 14:30~17:00
- 제9차 회의(원격영상회의): 2021. 2. 1. 15:00~17:00
- 제10차 회의(원격영상회의): 2021. 4. 26. 15:00~17:00
- 제11차 회의(원격영상회의): 2021. 5. 10. 15:00~17:00



- ▣ 제12차 회의(원격영상회의): 2021. 6. 21. 15:00~17:00
- ▣ 제13차 회의(원격영상회의): 2021. 8. 30. 15:00~17:00
- ▣ 제14차 회의(원격영상회의): 2021. 9. 13. 15:00~17:00

나. 토의 내용

▣ 회부 안건의 확인 및 연구·검토 방식 논의

- 회부 안건 ⇨ 제1심 민사 단독판결 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 법원 내·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보고서 작성 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 설문조사의 계획 및 시행

- 보고서 작성 팀에서 법관 및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문항 초안 작성
-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문조사 문항 확정 후 시행

▣ 종합보고서 작성

-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서 초안 작성
- 분과위원회 논의 및 세부 쟁점에 대한 표결을 거쳐 종합보고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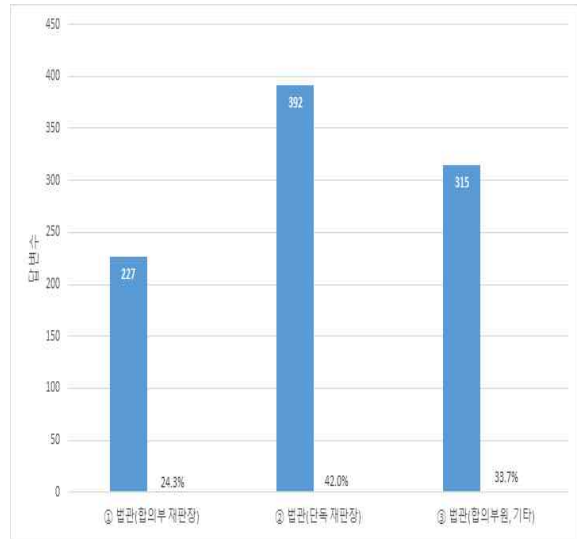
다. 설문조사 개요

▣ 법관 대상 설문조사

- 기간: 2021. 7. 12.(월) ~ 2021. 7. 16.(금)
- 방법: 온라인
- 총 설문대상자 수: 2,981명(대법원장, 대법관 및 처·차장 제외)
- 총 설문응답자 수: 942명(응답률: 31.6%)
- 설문 응답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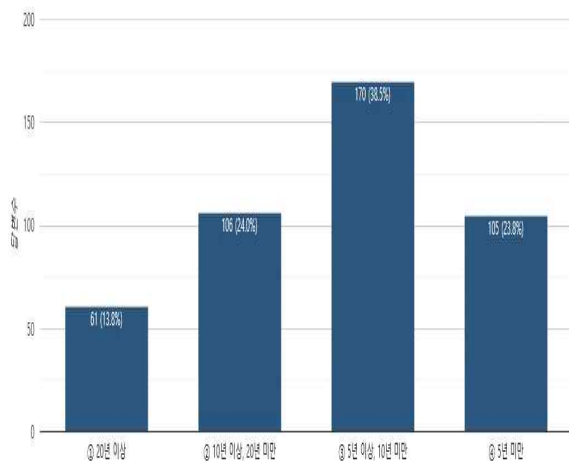
| 구분 | 응답자(명) | 백분율(%) |
|--------------------|--------|--------|
| ① 법관 (합의부 재판장) | 227 | 24.3 |
| ② 법관 (단독 재판장) | 392 | 42.0 |
| ③ 법관 (합의부원, 기타) | 315 | 33.7 |
| ④ 무응답 | 8 | 0.0 |
| 합계 | 942 | 100 |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기간: 2021. 7. 12.(월) ~ 2021. 7. 16.(금)
- 방법: 온라인
- 총 설문대상자 수: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변호사) 26,477명
- 총 설문응답자 수: 442명(응답률: 1.66%)
- 설문 응답자 구성

| 변호사 경력 | 응답자(명) | 백분율(%) |
|--------------------|--------|--------|
| ① 20년 이상 | 61 | 13.8 |
| ②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6 | 24.0 |
|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 170 | 38.5 |
| ④ 5년 미만 | 105 | 23.7 |
| 합계 | 442 | 100 |



3. 토의 배경지식



■ 사물관할의 변천 과정

| | 소 액 | 단 독 | 합 의 |
|-------------|-------------|---------------------|-------------|
| 1980. 2. ~ | 50만 원 이하 | 5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초과 |
| 1981. 3. ~ | 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초과 |
| 1983. 9. ~ | 200만 원 이하 | 2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초과 |
| 1987. 9. ~ | 5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
| 1991. 9. ~ | 5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초과 |
| 1993. 10. ~ | 1,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초과 |
| 1998. 3. ~ |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초과 |
| 2001. 3. ~ |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초과 |
| 2015. 2. ~ |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2억 원 | 2억 원 초과 |
| 2017. 1. ~ | 3,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 2억 원 | 2억 원 초과 |

■ 사물관할에 관한 규정

● 법원조직법 ⇨ 제1심 단독제 원칙 선언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사물관할 규칙’ 이라 함)**

○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²⁾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³⁾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심 단독관할 확대 관련 결의안**

● **2019. 12. 2.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찬성 64명, 반대 30명)**

대법원은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1심 단독재판을 확대하고, 소가·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사회적 중요도와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합의재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2020. 12. 7.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찬성 80명, 반대 23명)**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1심 단독관할 확대에 관하여 ‘사물관할 규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 규칙 제2조 본문의 소가는 4억 원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2.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아래 각 유형의 사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가. 대여금청구 사건

나. 주택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 그 밖에 추후 검토를 통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의 사건

2)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사물관할 규칙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소가(청구목적의 값) 2억 원 초과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정함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④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규칙 제2조 본문 및 단서의 개정으로 단독관할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4. 외국의 사례

가. 영미법계

1) 영국

■ 원칙: 단독재판

■ 예외: 법원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상소심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대부분)

■ 법원별 재판부 구성

| | 관할권 | 재판부 구성 |
|------------------------------|--------------------------|---|
| 구역법원 (County Court) | 민사 1심 | 단독재판부 ⁴⁾ |
|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 경미 형사 1심 | 치안판사 ⁵⁾ : 2-3인 재판부 구역판사: 단독재판 |
| 형사법원 (Crown Court) | 치안법원 항소심, 중요 형사 1심 | 단독재판부 |
| 고등법원 (High Court) | 중요 민사 1심, 경미 민·형사 항소심 | 통상 단독재판부 ⁶⁾ , 예외적으로 중대·복잡한 사건의 경우 2인 이상의 합의부 |
|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 고등법원 항소심, 형사법원 항소심 | ○ 민사부: 보통 3인 재판부(간혹 2인 재판부 존재, 단독재판부도 가능) ○ 형사부: 보통 3인 재판부(예외 적으로 2인 재판부 존재, 중요 한 법률적 판단 등이 필요한 경우 5인 재판부도 가능) |

4) 1984년 구역법원법(County Courts Act 1984) 제62조(법적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결정하는 법관의 일반적인 권한)
- 본 법률 조항들과 법원 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구역법원의 법관은 구역법원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의 단독 법관이 되며 모든 사실의 문제와 법적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5) 치안판사(magistrate)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됨.



■ 사건의 이송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은 사건에 대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구역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고등법원 내의 사건 이송 가능⁷⁾
- 이송 신청은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법원은 일반 대중에게의 중요성, 사건의 난이도 또는 안보 등을 고려하여 이송 명령을 할 수 있음

2) 미국

■ 연방지방법원

- 원칙: 단독재판

○ 사법 및 사법절차법(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U.S. Code Title 28 section 132(c) 법률 또는 법원의 규칙이나 명령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신청·소송 및 절차에 관한 지방법원의 재판권은 1인의 단독판사에게 있다.

- 예외: 3인 합의체 구성 ⇨ 상시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제기되면 임시로 구성되었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함

○ 위 법률 section 2284(a)

의회제정법이 요구한 사건, 의회 지역 선거구 배분 또는 주 의회의 배분의 합헌성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3인 합의체를 구성한다.

- 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체를 구성한 사례는 많지 않음 ⇨ 2020년 3회, 2019년 4회, 2018년 11회, 2017년 9회, 2016년 7회

■ 주지방법원

6) 1981년 상급법원법(Senior Courts Act 1981) 제19조(고등법원의 일반 관할권)

(3) 고등법원의 모든 관할권은 해당 법원의 단독 법관에 의해 행사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a) 법원 규칙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의해 지역법원(divisional court)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

(b) 법원 규칙에 의해 수석법관(master), registrar 또는 법원의 다른 담당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

7) 영국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Part 30 - 이송(Transfer) 참조.



- 단독재판부만 운용

- 통상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특별법원(하급법원), 주요 사실심 법원인 일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법원과 일반법원 모두 단독재판부만 운용

- 연방(주)항소법원, 연방(주)대법원: 합의체 구성 원칙

- 단독재판에 대한 보완책 ⇨ 배심제를 통한 사실인정

3) 싱가포르

- 제1심은 예외 없이 단독재판

- 일반적으로 소가에 따라 고등법원, 지방법원, 치안법원, 소액사건심판소가 제1심을 나누어 담당 ⇨ 법원별로 법관 임용 자격(법조경력)을 달리 정함

- 지방법원: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7년 이상

- 치안법원: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

나. 대륙법계

1) 독일

- 원칙: 단독재판

- 제1심은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구법원(Amtsgericht)⁸⁾, 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법원(Landesgericht)⁹⁾으로 구성

- 경미한 사건: 구법원 ⇨ 지방법원 ⇨ 연방대법원의 3심 구조

- 중요한 사건: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연방대법원의 3심 구조

- 구법원: 단독재판부만 운용¹⁰⁾

8) 구법원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적 가치를 가진 청구권에 관한 다툼으로 그 금액이 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건, 소가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주거의 임대차 관계의 존속에 관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을 담당함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제23조 제2호].

9) 법원조직법 제71조(제1심 민사사건의 관할권)

(1) 상사사건 재판부를 포함한 민사합의부는 구법원에 배당되지 않은 모든 민사 분쟁을 담당한다.

10) 법원조직법 제22조(구법원 판사)

(1) 구법원은 단독판사가 주재한다.



- **지방법원**: 법원조직법상 민사합의부(Zivilkammer)만을 규정하고 있으나¹¹⁾,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제1심 사건을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가 재판하도록 함

- 제1심 단독관할을 확대하여 각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짐
-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지방법원 단독사건 비율이 약 37%에서 약 70%로 증가¹²⁾

○ 민사소송법(ZPO) 제348조[본래적 단독판사(Originärer Einzelrichter)]

① 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단독판사로서 재판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비판사인 구성원이 사무분담표상 민사사건을 담당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법원조직법 제72a조 1, 2항에 따른 합의부관할¹³⁾과 합의부가 법원의 사무분담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할하게 된 경우
 - a) 모든 종류, 특히 신문·방송·영화·텔레비전의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에 의한 공표에 기한 청구권에 관한 분쟁
 - b) 은행 및 금융업에 관한 분쟁
 - c) 건축 및 건축사계약, 그리고 건설도급과 관련 있는 기술자계약에 관한 분쟁
 - d)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세무사, 세무대리사, 공인회계사 및 선서회계사의 직무상 활동에 관한 분쟁
 - e) 치료행위에 기한 청구권에 관한 분쟁
 - f) 법원조직법 제95조의 상사사건에 관한 분쟁
 - g) 운송업, 운송주선업 및 창고업에 기한 청구권에 관한 분쟁
 - h) 보험계약관계에 기한 분쟁

11) 위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참조.

12)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chtspflege) Reihe 2.1 (Zivilgerichte) 2017 vom 23.7.2018, S. 62.

13) **법원조직법 제72a조(특별 재판기구의 의무적 설치)**

(1) 지방법원에서 다음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민사합의부를 설치한다.

1. 은행 및 금융업에 관한 분쟁
2. 건축 및 건축사계약, 그리고 건설도급과 관련 있는 기술자계약에 관한 분쟁
3. 치료행위에 관한 분쟁
4. 보험계약관계에 기한 분쟁
5. 모든 종류, 특히 신문·방송·영화·텔레비전의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에 의한 공표에 기한 청구권에 관한 분쟁
6. 상속 분쟁
7. 파산법에 따른 분쟁 및 항고, 채권자취소법에 따른 취소소송, 기업안정 및 회생법에 따른 분쟁과 항고

(2) 주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하나 이상의 합의부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 주정부는 그 권한을 지방사법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i) 저작권 및 출판권 분야에 관한 분쟁

j)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에 관한 분쟁

k) 소가와 관계없이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

② 제1항 요건의 존재에 관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③ 단독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수(Übernahme)에 관한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합의부로 제출(Vorlage)한다.

1. 사건이 사실관계 또는 법률문제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중요한(grundsätzlich) 의미를 갖는 경우

3.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신청하는 경우

합의부는 제1문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을 인수한다. 합의부는 이에 관하여 결정으로 재판한다. 단독판사에게 재이전할 수 없다.

④ 사건의 합의부로의 회부 여부 또는 합의부의 사건 인수 여부는 상소의 이유로 삼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348a조[의무적 단독판사(Obligatorischer Einzelrichter)]

① 제348조 제1항에 따른 원칙적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지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민사합의부는 결정으로 그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단독판사로서 재판하도록 사건을 위탁(Übertragung)한다.

1. 사건이 사실관계상 또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2.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고,

3. 아직 본안에 관하여 변론기일에서 심리되지 않은 경우(다만, 이미 유보판결, 일부판결 또는 중간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독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수에 관한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합의부로 회부한다.

1. 소송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사실관계 또는 법률문제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갖게 된 경우

2.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신청하는 경우

합의부는 제1문 제1호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을 인수한다. 합의부는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으로 재판한다. 단독판사에게 재이전할 수 없다.

③ 사건의 위탁, 회부 또는 인수 여부는 상소의 이유로 삼지 못한다.

■ 예외적 합의관할: ① 예비판사인 재판부 구성원이 민사재판을 담당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② 민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일정 유형의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



-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

■ 합의부로의 이송

-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① 사실관계 또는 법률 문제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③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단독판사는 인수에 관한 재판을 위해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 회부(민사소송법 제348조 제3항)
-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단독판사는 위 ① 또는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 회부하여야 하지만, 합의부는 위 ① 또는 ②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건을 인수함(인수 여부에 대한 재량 인정)
 - 이송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고, 이송 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¹⁴⁾
 - 단독판사의 합의부에의 제출(Vorlage)은 재판이 아닌 처분(Verfügung)으로서 단지 합의부의 재판을 위한 요건을 제공할 뿐임
 - 단독판사는 합의부에의 제출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없음
-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 당사자들이 합의부로의 이송을 신청하는 비율은 2% 정도이고, 그 중 65%는 기각되었다고 함¹⁵⁾
- 사건 인수 여부에 대한 합의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상소의 이유로도 삼을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348조 제4항)

■ 2019년 기준 전체 법원 민사사건 처리건수 1,267,995건 중 합의부사건 92,609건 ⇨ 합의부사건 비율 7.3%

14) Thomas Rauscher, Wolfgang Krüger,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Nebengesetzen, 6. Aufl. München, C.H.Beck, 2020, ZPO § 348 Rn. 19.

15) Christoph Hommerich, Hannas Prütting et al. Rechtstatsächliche Untersuchung zu den Auswirkungen der Reform des Zivilprozessrechts auf die gerichtliche Praxis – Evaluation ZPO-Reform, 2006, Bundesanzeiger, Köln, p.133. 위 책은 2002년 독일 민사소송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발간한 책이다.



- 구법원 사건을 제외하면, 2019년 기준 지방법원 제1심 처리건수 341,481건 중 합의부사건 92,609건 ⇨ 지방법원 내 합의부사건 비율 27.1%

■ 독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평가¹⁶⁾

- 1심 법관의 원칙적 단독화 이후 1심의 업무경감 효과를 인정하는 법관이 56%, 인정하지 않는 법관이 37%
- 1심 법관의 원칙적 단독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변호사가 48%, 불만족이라고 답한 변호사가 26%
- 만족의 주된 이유는 소송절차가 더 충실하게 준비되고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37%), 불만의 주된 이유는 재판의 질 하락(17%)과 법관 상호 간의 통제와 협의가 없다는 점(16%)

2) 프랑스

■ 원칙: 합의재판¹⁷⁾

■ 예외: 단독재판

- 법원장은 결정으로 신분이나 징계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사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단독판사로 하여금 재판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원장이 단독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1만 유로 이하의 소액사건, 교통사고, 외국재판의 승인, 미성년자 재산 매매, 선거인 명부, 후견, 육상교통 사건 등 일부 유형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함

- 합의재판의 경우도 모두 직업법관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이 법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단독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함

3) 일본

■ 원칙: 단독재판

- 재판소법 제26조(1인제 합의제)
- ① 지방법판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의 재판관이 그 사건을 취급한다.

16) 위 책 pp.37-39.

17) 사법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212-1.



② 다음에 게시하는 사건은, 재판관의 합의체에서 취급한다. 단, 법정에서 해야 할 심리 및 재판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을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

1.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한다는 결정을 합의체에서 한 사건
 2. 사형, 무기 혹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236조,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죄 및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1조의3 제1항의 죄 및 절도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죄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건
 3. 간이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및 간이재판소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해야 한다고 정한 사건
- ③ 전항의 합의체의 재판관의 인원수는 3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 예외: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재판소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재판소의 각 재판부 안에 ‘합의계’와 ‘단독계’가 있고, 각 재판부에서 합의사건으로 할 것인지 단독사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¹⁸⁾

- 통상 사건의 접수 단계에서 좌배석 판사가 주임서기관과 함께 합의에 부칠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장에게 보고하고, 부장이 결정함
-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체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음

- 각 재판소별로 어떤 유형의 사건을 합의사건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

- 오사가 지방재판소의 예: “헌법판단을 요하는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대방인 손해배상청구사건,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사건, 공해·의료 등의 특수손해배상청구사건, 제조물책임, 증권거래·상품거래에 관한 어려운 사건, 청구 금액이 10억 엔을 초과하는 사건, 당사자가 20~30인을 넘는 집단소송사건,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그 외 사건의 성질, 내용에 비추어 합의사건으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신임판사보의 연찬을 위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사건, 단독과 합의 사건 수의 균형을 위해 합의사건으로 하는 사건 등”을 합의사건으로 함

18) 하급재판소사무처리규칙 제6조(재판사무의 분배 등)

- ①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가정재판소에서 재판사무의 분배, 재판관의 배치 및 재판관에게 지장이 있을 때의 대리순서에 대해서는, 매년 사전에 당해 재판소의 재판관회의로 이를 결정한다.
- ② 각 부 또는 각 지부의 재판관에 대한 재판사무의 분배는, 당해 부 또는 당해 지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 통상 사건의 종류나 규모, 당사자의 속성,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의 미제건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함¹⁹⁾

▣ 2018년 기준 간이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 사건 접수건수 138,683건 중 합의 사건 7,681건 ⇨ 약 5.5%가 합의사건으로 처리됨

▣ 당사자에게 합의부로의 이송 신청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 검토

- ▣ 영국, 미국 등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제1심 단독재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
- ▣ 독일, 일본 등 법관 즉시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제1심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5.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여부

가. 기초 통계²⁰⁾

▣ 합의사건 기초 통계

[합의사건 기초 통계(지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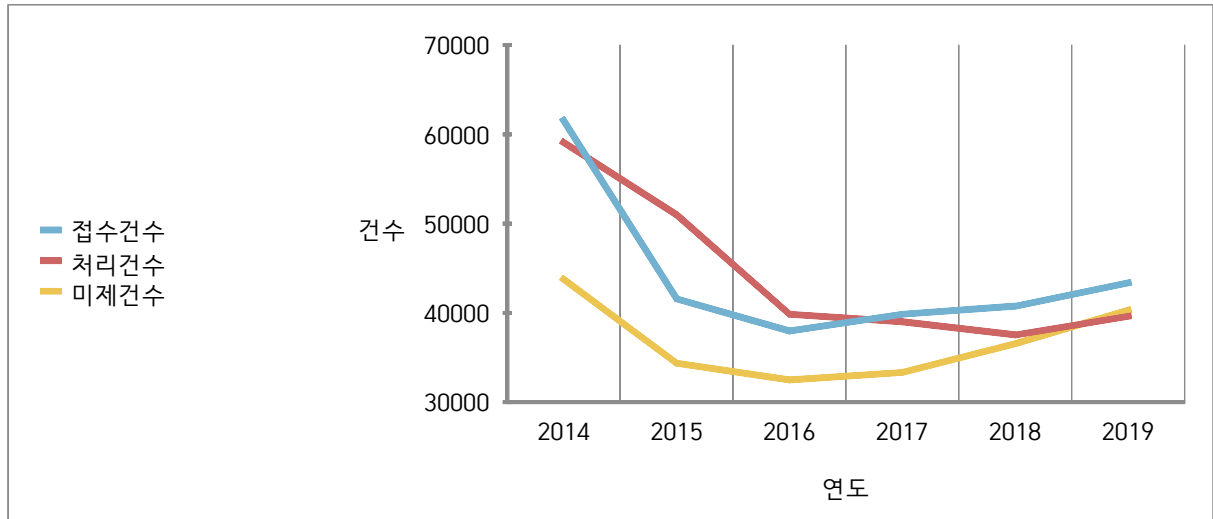
| | 실질 재판부 수 ²¹⁾ | 접수건수 | 처리건수 | 미제건수 | 평균처리 기간(일) ²²⁾ | 첫 기일까지 평균소요기간 (일) ²³⁾ | 장기미제 비율(%) ²⁴⁾ | 미제 분포지수 ²⁴⁾ |
|-------|----------------------------|--------------------------------|-----------------|-----------------|---------------------------------|---|---------------------------------|------------------------------|
| 2014년 | 134.974 | 61,557 (456) ²⁵⁾ | 59,107 (438) | 43,772 (324) | 252.3 | 112.3 | 3.3 | 56.5 |
| 2015년 | 115.3615 | 41,579 (360) | 50,987 (442) | 34,363 (298) | 284.8 | 116.9 | 6.1 | 34.0 |
| 2016년 | 110.104 | 37,974 (345) | 39,841 (362) | 32,497 (295) | 326.7 | 120.3 | 3.8 | 38.3 |
| 2017년 | 105.534 | 39,853 (378) | 39,012 (370) | 33,339 (316) | 303.9 | 117.5 | 4.1 | 37.5 |
| 2018년 | 105.924 | 40,755 (385) | 37,533 (354) | 36,559 (345) | 307.6 | 122.4 | 4.2 | 35.1 |
| 2019년 | 107.103 | 43,384 (405) | 39,634 (370) | 40,309 (376) | 312.5 | 126.7 | 4.7 | 30.2 |

19) 最高裁判所事務總局,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結果の公表(第7回)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1440号(2017.11),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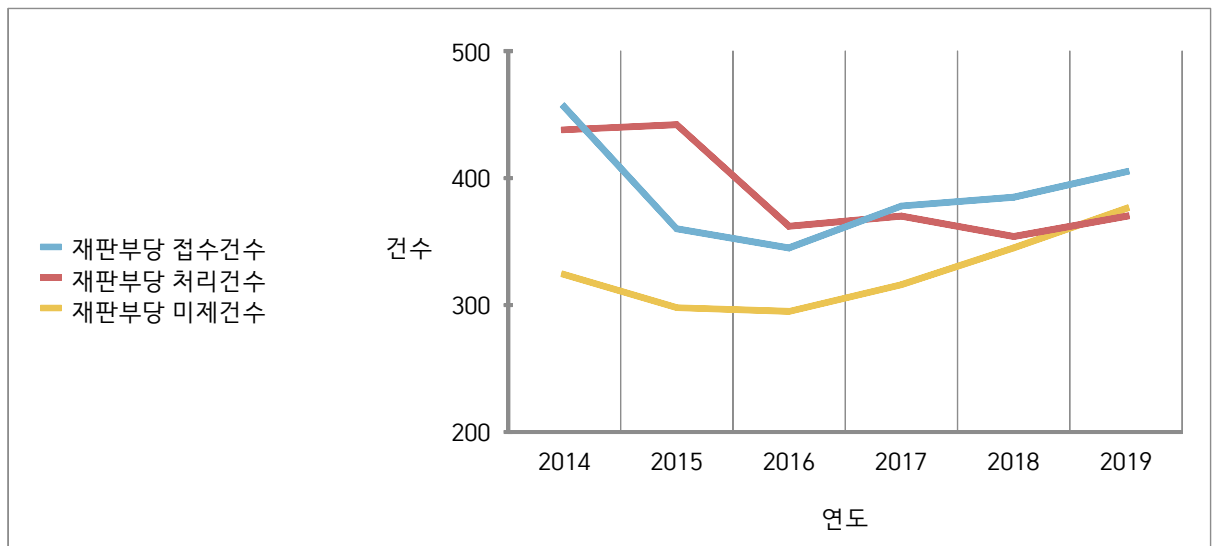
20) 이 회의자료의 모든 통계는 '소권 남용'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건들을 제외한 비공식적 통계임.



[합의사건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지원 포함)]



[합의사건 재판부당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지원 포함)]



▣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 기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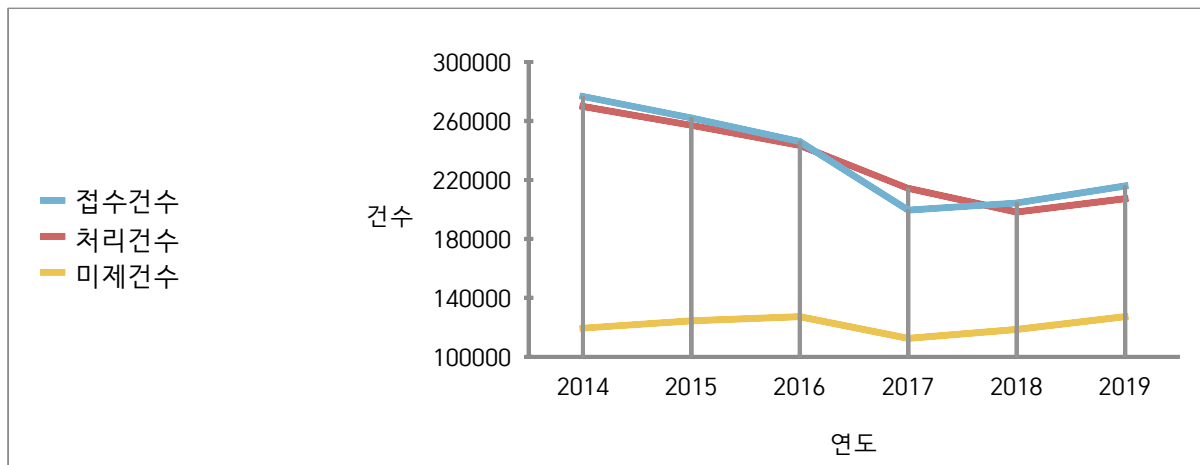
- 21) '실질재판부 수'란, 하나의 재판부가 여러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산정한 재판부 수를 의미함(예: 재판부의 전체 업무 중 민사사건 업무가 80%이고 가사사건 업무가 20%인 경우, 실질재판부 수는 민사재판부 0.8개 및 가사재판부 0.2개로 산정).
- 22) 사건 접수일로부터 종국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한 수치.
- 23) 장기미제건수 / 전체 미제건수 × 100%.
- 24) 6개월 이내 사건점유율 + (1년 이내 사건점유율 × 0.9) - 2년 이내 사건점유율 - (2년 초과 사건점유율 × 2). 미제분포지수가 높을수록 오래된 사건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5)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건수를 실질재판부 수로 나눈 '재판부당 건수'임(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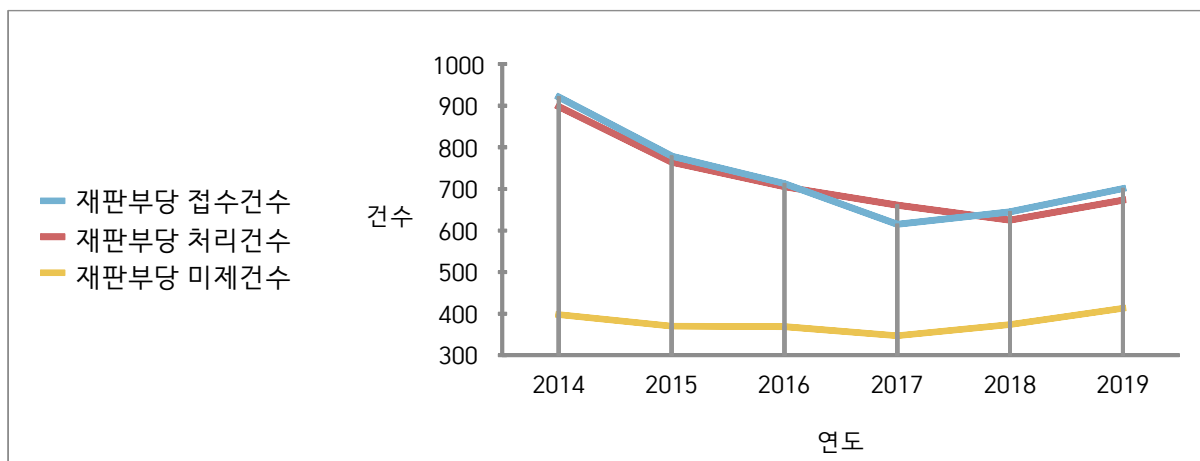
[단독사건 기초 통계(지원 포함)]

| | 실질 재판부 수 | 접수건수 | 처리건수 | 미제건수 | 평균처리 기간(일) | 첫 기일까지 평균소요기간 (일) | 장기미제 비율(%) | 미제 분포지수 |
|-------|-------------|------------------|------------------|------------------|---------------|-------------------------|---------------|------------|
| 2014년 | 300.242 | 276,667 (921) | 269,882 (899) | 119,386 (398) | 160.8 | 101.9 | 1.0 | 78.8 |
| 2015년 | 336.37 | 262,099 (779) | 257,095 (764) | 124,390 (370) | 174.8 | 108.3 | 1.3 | 76.7 |
| 2016년 | 344.76 | 246,043 (714) | 243,321 (706) | 127,112 (369) | 187.7 | 110.1 | 0.6 | 71.5 |
| 2017년 | 324.03 | 199,500 (616) | 214,202 (661) | 112,411 (347) | 204.6 | 114.6 | 0.9 | 62.8 |
| 2018년 | 316.67 | 204,297 (645) | 198,145 (626) | 118,562 (374) | 210.5 | 118.7 | 1.3 | 63.4 |
| 2019년 | 307.81 | 215,907 (701) | 207,237 (673) | 127,232 (413) | 211.6 | 120.0 | 1.4 | 62.1 |

[단독사건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지원 포함)]



[단독사건 재판부당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지원 포함)]





나. [제1안]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 인정

■ 규범적 당위성

- 법원조직법은 제1심 단독제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하위 법령인 사물관할 규칙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합의부 심판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비교법적 검토

- 영국·미국 등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제1심 단독재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독일·일본 등 법관 즉시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제1심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우리나라 역시 제1심 단독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임

■ 단독관할 확대에 의한 장점

- 재판의 신속성, 경제성²⁶⁾ 제고
 - 당사자들에게는 사건의 적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신속한 처리도 중요한 문제임
 - 제1심 단독관할 확대를 통해 합의부의 상당수를 단독재판부로 전환하여 재판부

26)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증설 가능 ⇨ 각 재판부의 부담 완화로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

- 현재 합의사건 중에는 별다른 논점이 없는 등 처리가 용이한 사건이 다수 존재
하므로, 이러한 사건들까지 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짐
- 재판부 증설을 통해 사건 심리시간을 충분히 확보 ⇨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 실현
-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장기 경력 법관 증가 ⇨ 재판장으로서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있음
- 재판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능력 발휘 가능
-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 재판부 수의 증가로 보다 세밀한 사무분담 가능
- 판단의 독립성 보장
- 권위주의, 사법관료화 방지

■ 사건처리 적체 해소

- 합의부 사건처리 지표의 악화²⁷⁾
 - 2015. 2.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2014년 대비 2015년 접수건수 약 67%로 감소하여 합의부 부담 완화
 - 그러나 2016년 합의사건 접수건수 37,974건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지속적 증가 추세 ⇨ 2016년 대비 2019년 접수건수 114%로 상승
 - 실질재판부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6년 대비 2019년 재판부당 접수건수 117%, 재판부당 미제건수 127%로 상승(재판부당 처리건수는 큰 변동 없음)
 - 그 외의 사건처리 지표 역시 다음과 같이 악화
 - 평균처리기간: 2015년 284.8일/2019년 312.5일 ⇨ 27.7일 증가
 - 첫 기일까지 평균소요기간: 2015년 116.9일/2019년 126.7일 ⇨ 9.8일 증가
 - 장기미제²⁸⁾ 비율: 2016년 3.8%/2019년 4.7% ⇨ 0.9% 증가

27) 제16, 17면 참조.



○ 미제분포지수: 2016년 38.3/2019년 30.2 ⇨ 8.1감소

● 단독재판부 사건처리 지표의 악화²⁹⁾

- 2017. 1. 소액사건 관할 기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 2016년 대비 2017년 접수건수 81%로 감소하여 단독재판부 부담 완화
- 그러나 이후 다시 접수건수 증가하여 2017년 대비 2019년 접수건수 108%로 증가
- 실질재판부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7년 대비 2019년 재판부당 접수건수 113%, 재판부당 미제건수 119%로 증가
- 그 외의 사건처리 지표 역시 다음과 같이 악화
 - 평균처리기간: 2015년 174.8일/2019년 211.6일 ⇨ 36.8일 증가
 - 첫 기일까지 평균소요기간: 2015년 108.3일/2019년 120.0일 ⇨ 11.7일 증가
 - 장기미제 비율: 2016년 0.6%/2019년 1.4% ⇨ 0.8% 증가
 - 미제분포지수: 2016년 71.5/2019년 62.1 ⇨ 9.4 감소

● 사건처리 적체의 해결 방안 ⇨ 재판부 증설

- 사건처리 적체의 두 가지 원인은 접수건수 증가 및 처리건수 감소로 볼 수 있음
- 합의·단독재판부의 연간 사건 처리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재판부당 처리건수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① 과거보다 고분쟁성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충실한 심리와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소송관계인들의 요청이 증대되고 있음 ⇨ 심리시간의 증가
 - ②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법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저하되면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업무부담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임
⇨ 과거의 재판부당 처리건수는 비정상적이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적정 처리 건수'를 설정·적용하는 법원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20. 10.경 우리나라 법관 67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³⁰⁾, 응답자의 48%가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회신하였고³¹⁾, 51.4%가 주 3회 이상

28)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2016. 11. 1.부터 장기미제 기준을 2년 초과에서 2년 6개월 초과로 변경함.

29) 제18면 참조.

30) 홍보람,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법관들의 인식”, 법관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전국법관대표회의 (2021. 2. 1.), 127면.



야근한다고 회신하였으며³²⁾, 63%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미국, 독일 법관의 평균 업무시간³³⁾이 주당 40-50시간 정도인 점³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부담은 여전히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③ 평생법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법관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판부당 처리건수의 증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재판부 증설을 통하여 사건 처리 적체를 해소하여야 함

- 물론, 본질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이지만, 법관 정원³⁵⁾ 및 예산의 제한, 법관 신규 임용자 법조경력 제한(아래 표 참조)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음(입법이 필요한 점,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지원자 수나 퇴직법관 수 등 현실적 증원에 변수가 있는 점) ⇨ 우선은 ‘제1심 단독판할 확대’가 재판의 질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장기적으로 법관, 재판연구원 증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임)

[2016년 이후 법관 임용 신규 풀 현황]

| 임용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최소 법조경력 | 3년 | | 5년 | | | | 7년 | | | | 10년 | | | | |
| 신규 법관 수 인 | 사 법 관 수 원 | 42기 (826) | 43기 (786) | | 44기 (509) | 45기 (356) | | | 46기 (234) | 47기 (171) | | | | 48기 (117) | 49기 (61) |
| 신규 법관 수 인 | 법 원 조 단 대 학 원 | 2회 | 3회 | | 4회 | 5회 | | | 6회 | 7회 | | | | 8회 | 9회 |

31) 응답한 법관의 14.4%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함.

32) 응답한 법관의 25.1%는 주 4회 이상 야근한다고 응답함.

33) 점심 및 휴식시간, 행정업무 등 비재판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

34) 사법정책연구원, 각국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외국사법제도연구 제26권) (2020), 97-123면, 231면.

35) 현재 법관 정원 3,214명(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



다. [제2안]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 부정

▣ 판단의 객관성과 적정성 저하

- 합의부 구성원 사이의 상호보완 작용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을 간과하거나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음
- 속칭 ‘제왕적 단독판사’에 대한 우려

▣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 저하

- 당사자들은 단독재판부보다는 합의부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이 저하됨

▣ 합의부의 교육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변호사회 의견

- 경력법관이 최소한의 법관연수만 받고 바로 제1심 단독사건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경력법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재판실무 경험을 쌓은 후 단독 재판장으로 보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음³⁶⁾

라. 설문조사 결과

▣ 법관 대상 설문조사

- 합의부 사건처리 적체 및 지연의 주요 원인(복수 선택 가능)³⁷⁾

- 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증대 (768, 81.6%)
- ② ‘일과 개인 삶의 균형’ 분위기 확산과 적정선고건수 감소 (714, 75.9%)
- ③ 당사자와 대리인의 기일 임박 서면 제출 관행과 재판 준비 미흡 등 (330, 35.1%)
- ④ 사건통계관리 등 사법행정의 약화 (98, 10.4%)

36) 2018. 6. 20. 제6차 대한변협·법원행정처 재판제도정책협의회 결과보고서 제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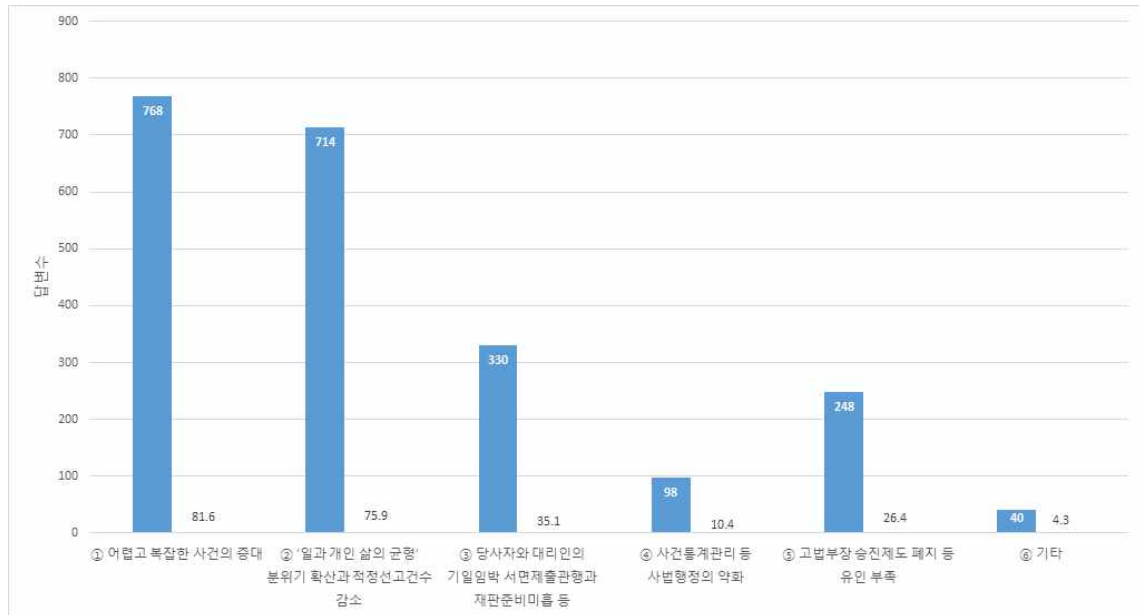
37)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41명.



⑤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등 유인 부족 (248, 26.4%)

⑥ 기타 (40, 4.3%)

- 법관 수 부족, 지나치게 상세한 판결서 작성 관행, 증거신청 및 구술심리 요청 증가, 비정상의 정상화(과거 통계는 법관의 과로를 전제로 함), 부동산 시가 급등으로 인한 소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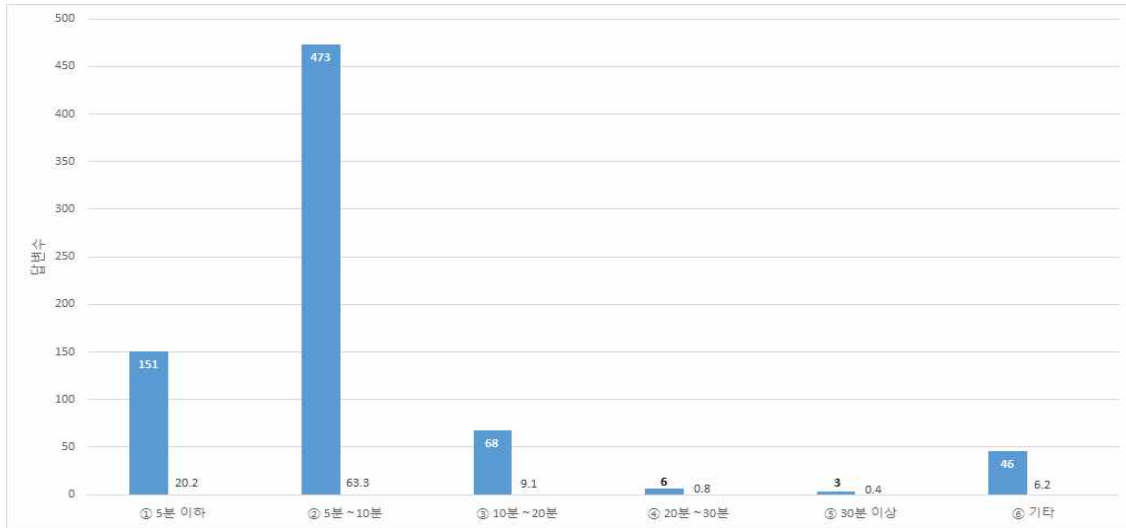
● 변론시간 추가 확보의 필요성

1. 현재 제1심 민사사건당 평균 변론시간

[합의부]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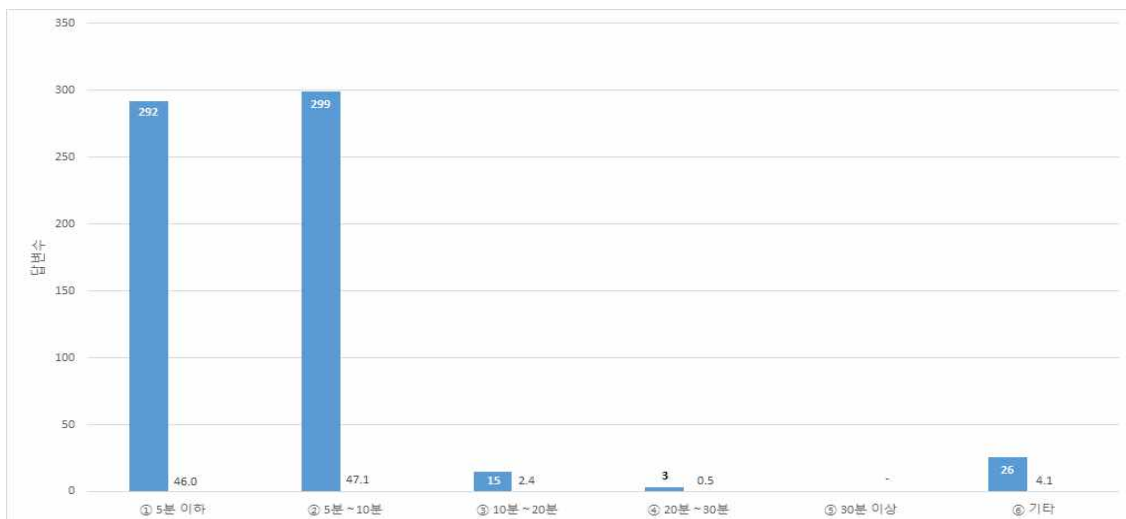
- ① 5분 이하 (151, 20.2%)
- ② 5분 ~ 10분 (473, 63.3%)
- ③ 10분 ~ 20분 (68, 9.1%)
- ④ 20분 ~ 30분 (6, 0.8%)
- ⑤ 30분 이상 (3, 0.4%)
- ⑥ 기타 (46, 6.2%)

38)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747명.



[단독재판부]³⁹⁾

- ① 5분 이하 (292, 46.0%)
- ② 5분 ~ 10분 (299, 47.1%)
- ③ 10분 ~ 20분 (15, 2.4%)
- ④ 20분 ~ 30분 (3, 0.5%)
- ⑤ 30분 이상 (0, 0%)
- ⑥ 기타 (26,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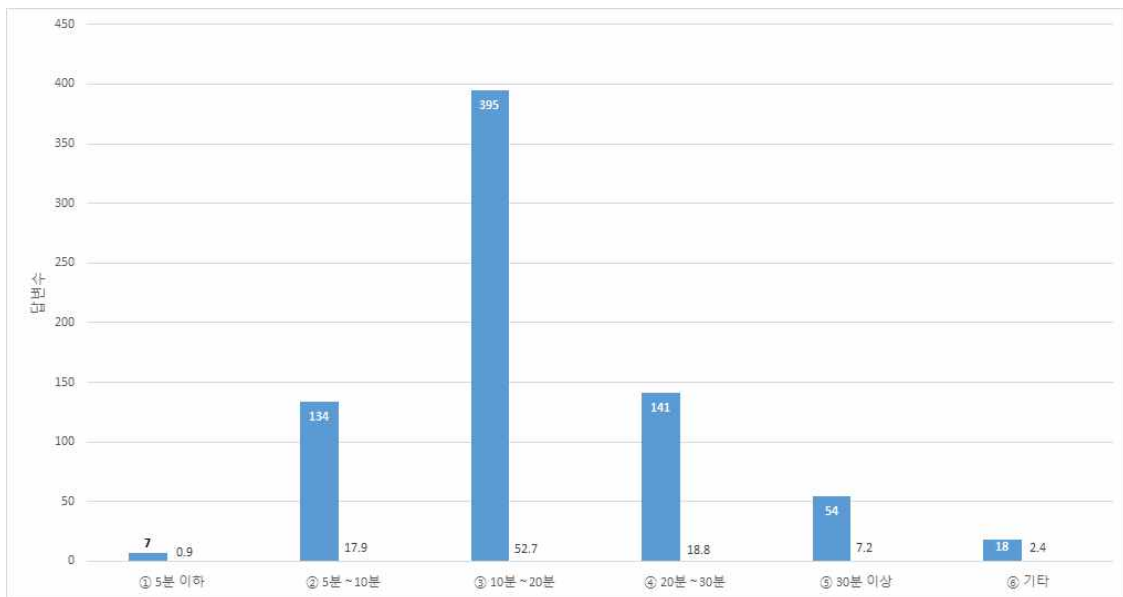
2. 충실한 심리를 위한 적정 변론시간

39)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635명.

[합의부]⁴⁰⁾

- ① 5분 이하 (7, 0.9%)
- ② 5분 ~ 10분 (134, 17.9%)
- ③ 10분 ~ 20분 (395, 52.7%)
- ④ 20분 ~ 30분 (141, 18.8%)
- ⑤ 30분 이상 (54, 7.2%)
- ⑥ 기타 (18, 2.4%)

- 사건별로 다름, 충실한 서면심리가 더 중요함, 대리인의 변론 준비 정도에 따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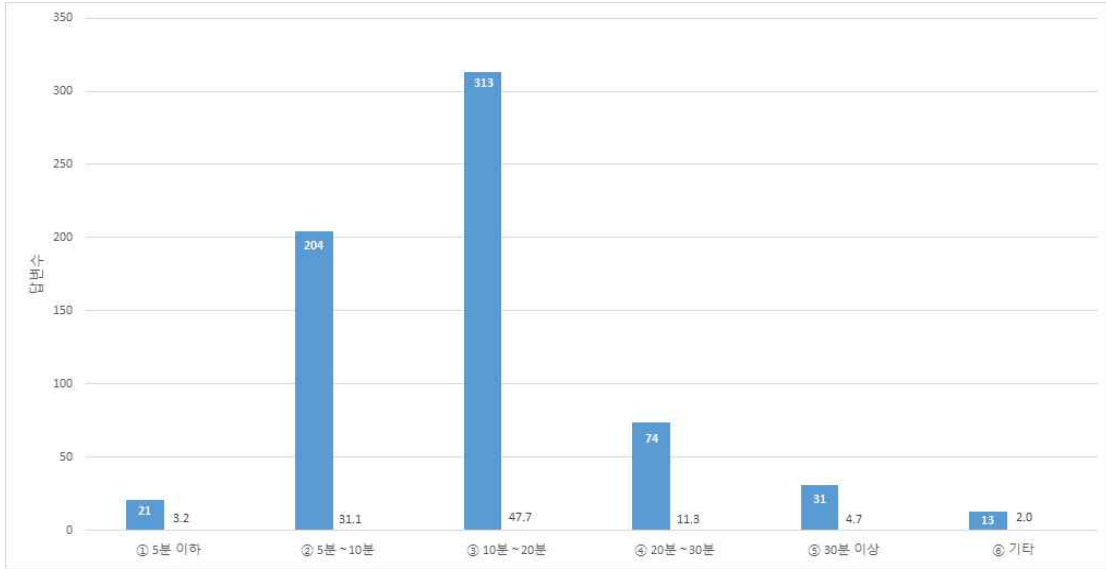
[단독재판부]⁴¹⁾

- ① 5분 이하 (21, 3.2%)
- ② 5분 ~ 10분 (204, 31.1%)
- ③ 10분 ~ 20분 (313, 47.7%)
- ④ 20분 ~ 30분 (74, 11.3%)
- ⑤ 30분 이상 (31, 4.7%)
- ⑥ 기타 (13, 2.0%)

- 사건별로 다름, 대리인의 변론 준비 정도에 따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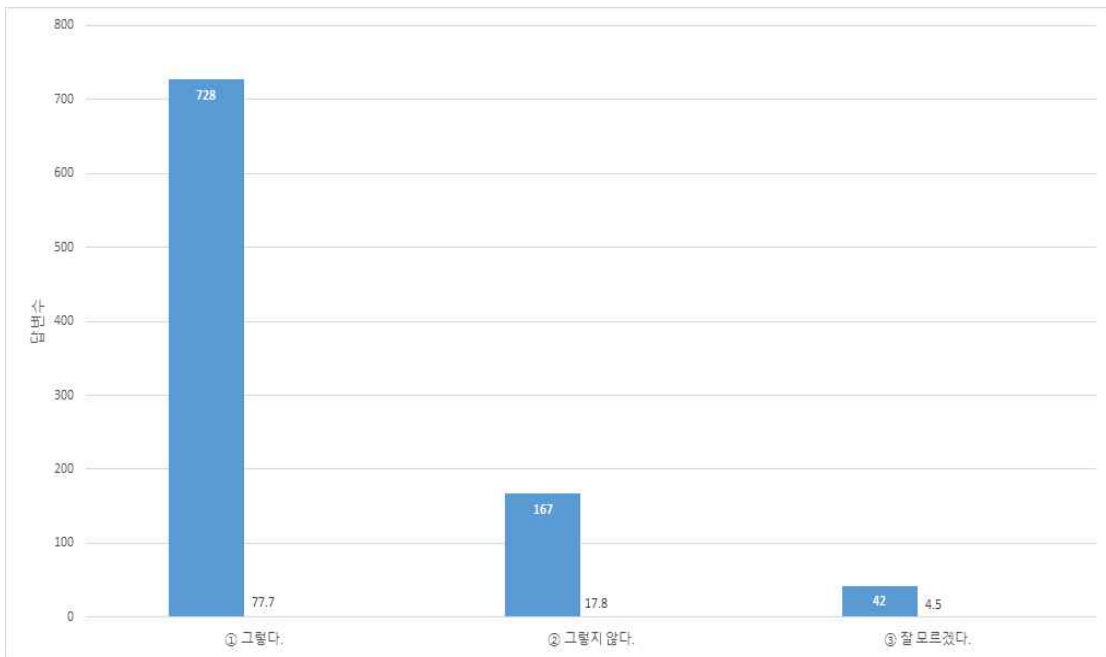
40)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749명.

41)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656명.



● 단독관할 확대 필요 여부⁴²⁾

- ① 그렇다. (728, 77.7%)
 ② 그렇지 않다. (167, 17.8%)
 ③ 잘 모르겠다. (42,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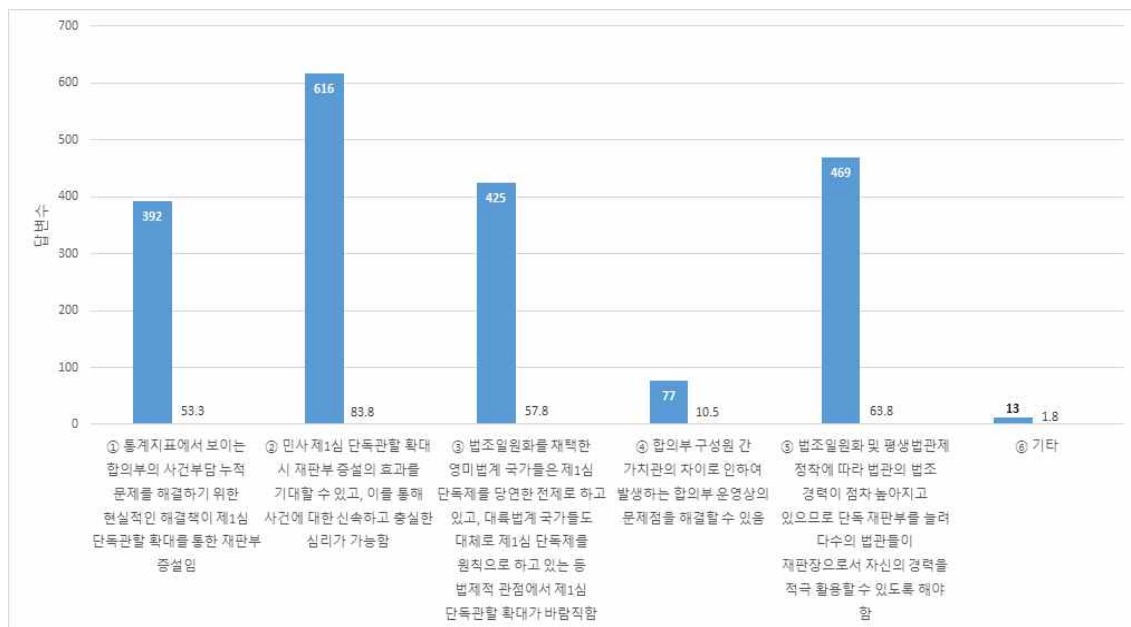


42)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37명.

●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한 이유(복수 선택 가능)⁴³⁾

- ① 통계지표에서 보이는 합의부의 사건부담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1심 단독관할 확대를 통한 재판부 증설임 (392, 53.3%)
- ②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 시 재판부 증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함 (616, 83.8%)
- ③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제1심 단독제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체로 제1심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법제적 관점에서 제1심 단독관할 확대가 바람직함 (425, 57.8%)
- ④ 합의부 구성원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의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77, 10.5%)
- ⑤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법관의 법조 경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단독 재판부를 늘려 다수의 법관들이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69, 63.8%)
- ⑥ 기타 (13, 1.8%)

- 소가만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분의 문제점, 화폐가치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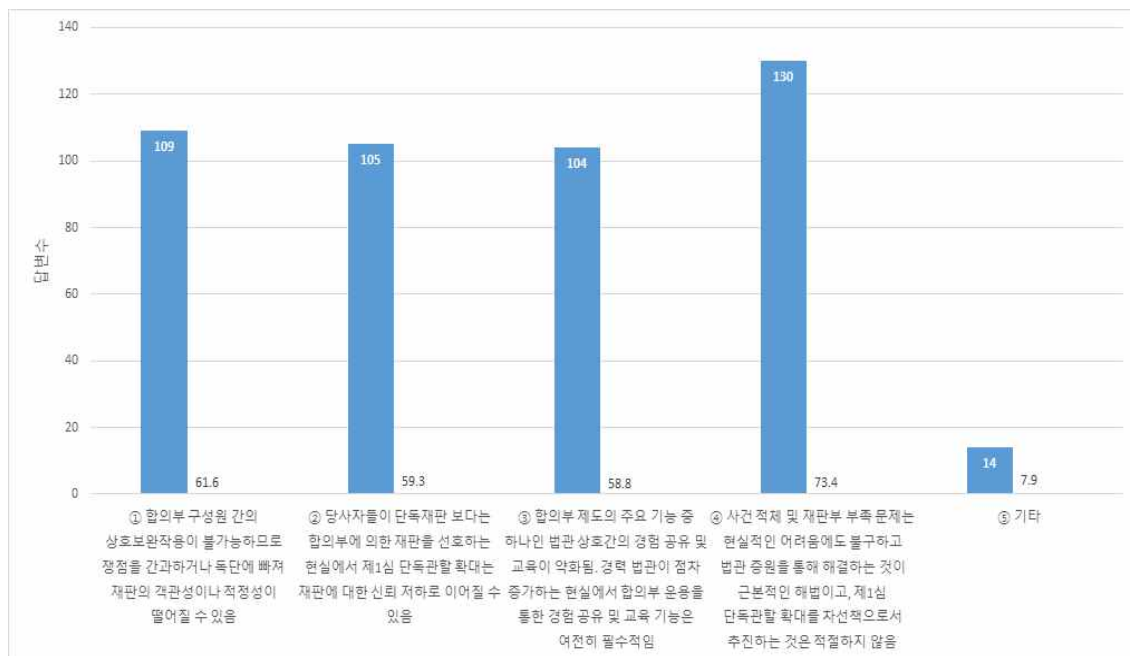


43)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는 735명(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28명 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1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명, 무응답자 5명 포함).

● 단독관할 확대가 부적절한 이유(복수 선택 가능)⁴⁴⁾

- ① 합의부 구성원 간의 상호보완작용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을 간과하거나 독단에 빠져 재판의 객관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 (109, 61.6%)
- ② 당사자들이 단독재판보다는 합의부에 의한 재판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제1심 단독관할 확대는 재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105, 59.3%)
- ③ 합의부 제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법관 상호간의 경험 공유 및 교육이 약화됨. 경력 법관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합의부 운용을 통한 경험 공유 및 교육 기능은 여전히 필수적임 (104, 58.8%)
- ④ 사건 적체 및 재판부 부족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고, 제1심 단독관할 확대를 차선택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30, 73.4%)
- ⑤ 기타 (14, 7.9%)

- 2015년 단독관할 확대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44)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질문 응답자는 177명(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67명 중 166명(1명 미응답) 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5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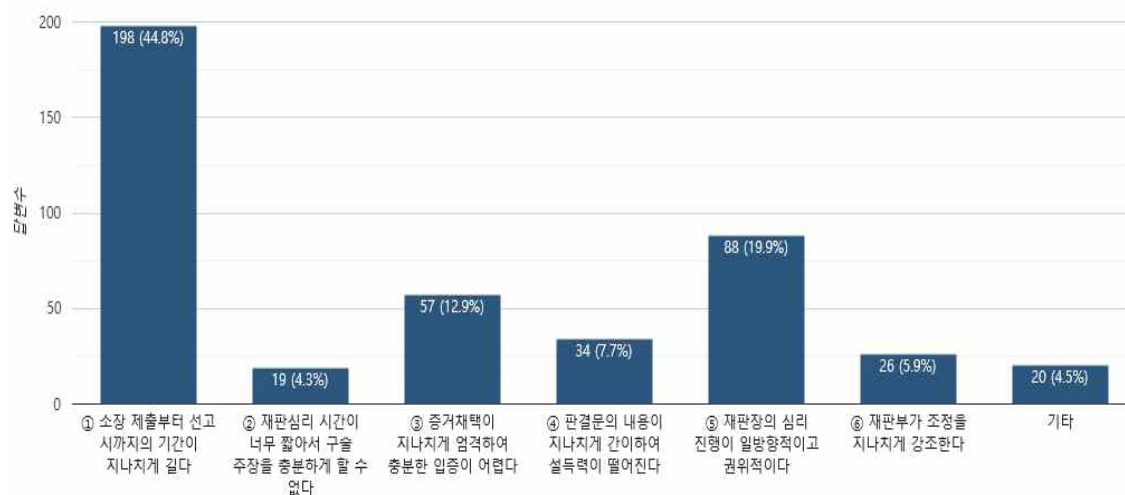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민사 제1심 합의부재판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

- ① 소장 제출부터 선고 시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198, 44.8%)
- ② 재판심리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술 주장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 (19, 4.3%)
- ③ 증거채택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충분한 입증이 어렵다 (57, 12.9%)
- ④ 판결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이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34, 7.7%)
- ⑤ 재판장의 심리 진행이 일방향적이고 권위적이다 (88, 19.9%)
- ⑥ 재판부가 조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26, 5.9%)
- ⑦ 기타 (20, 4.5%)

- 배석판사들의 독립성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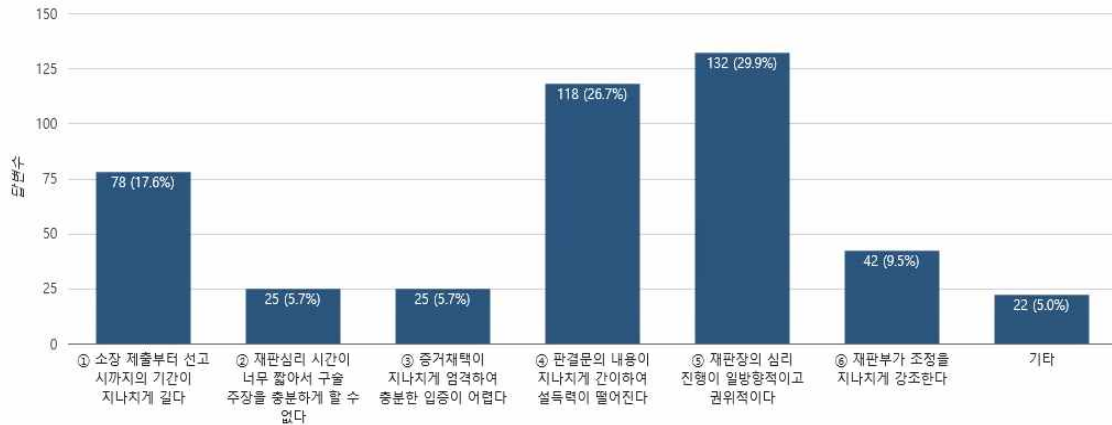


● 민사 제1심 단독재판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

- ① 소장 제출부터 선고 시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78, 17.6%)
- ② 재판심리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술 주장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 (25, 5.7%)
- ③ 증거채택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충분한 입증이 어렵다 (25, 5.7%)
- ④ 판결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이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118, 26.7%)
- ⑤ 재판장의 심리 진행이 일방향적이고 권위적이다 (132, 29.9%)
- ⑥ 재판부가 조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42, 9.5%)

⑦ 기타 (22, 5.0%)

- 법관들 사이의 보완기능이 없음, 재판부별 편차가 큼, 판사 개인의 문제일 뿐 제도의 문제는 아님, 판단 오류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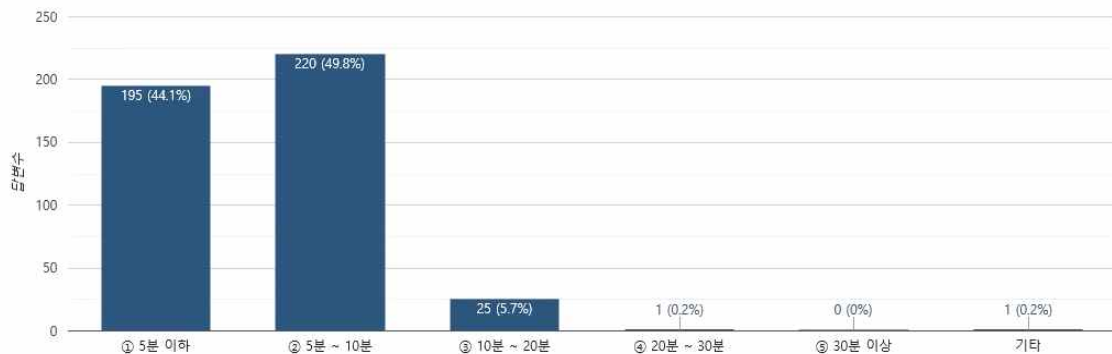


● 변론시간 추가 확보의 필요성

1. 현재 제1심 민사사건당 평균 변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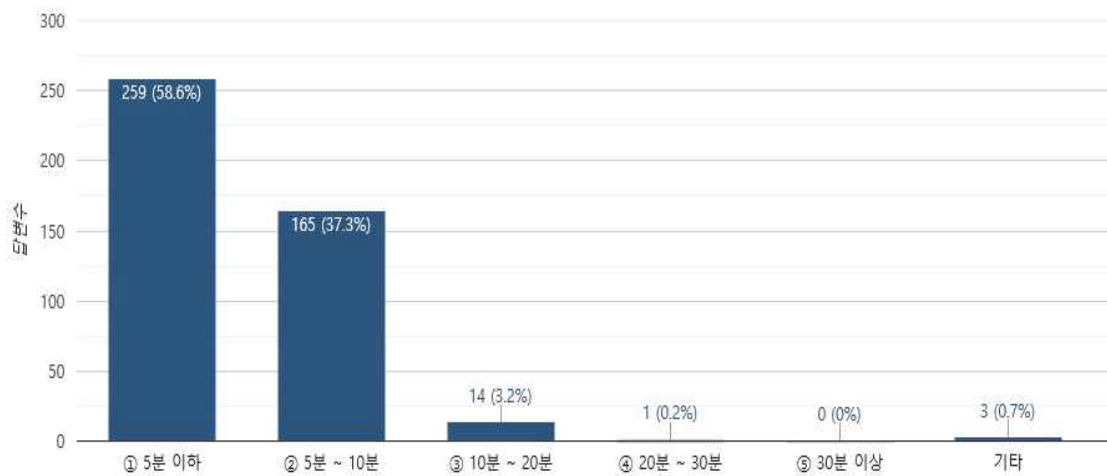
[합의부]

- ① 5분 이하 (195, 44.1%)
- ② 5분 ~ 10분 (220, 49.8%)
- ③ 10분 ~ 20분 (25, 5.7%)
- ④ 20분 ~ 30분 (1, 0.2%)
- ⑤ 30분 이상 (0, 0%)
- ⑥ 기타 (1, 0.2%)



[단독재판부]

- ① 5분 이하 (259, 58.6%)
- ② 5분 ~ 10분 (165, 37.3%)
- ③ 10분 ~ 20분 (14, 3.2%)
- ④ 20분 ~ 30분 (1, 0.2%)
- ⑤ 30분 이상 (0, 0%)
- ⑥ 기타 (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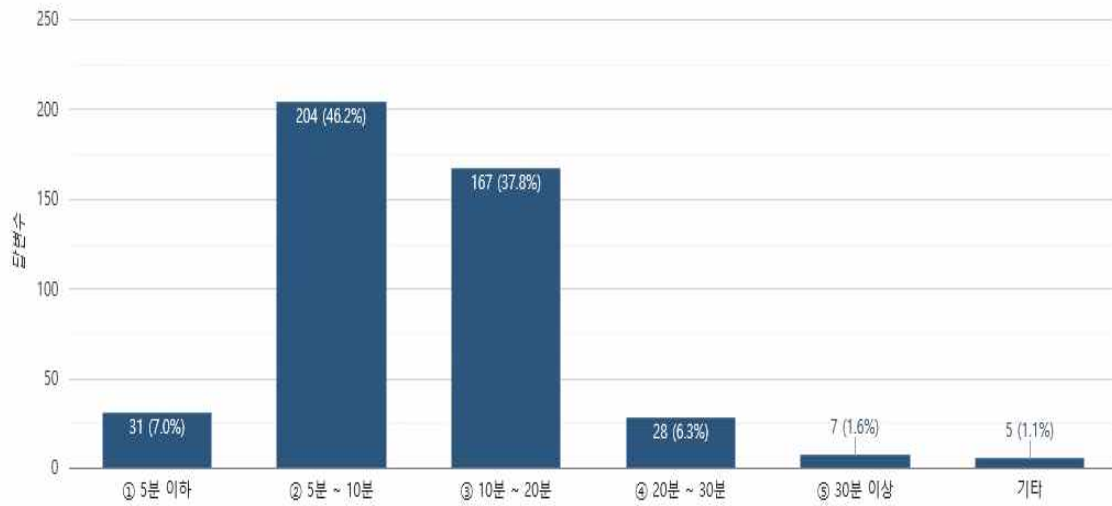


2. 충실한 심리를 위한 사건당 적정 변론시간

[합의부]

- ① 5분 이하 (31, 7.0%)
- ② 5분 ~ 10분 (204, 46.2%)
- ③ 10분 ~ 20분 (167, 37.8%)
- ④ 20분 ~ 30분 (28, 6.3%)
- ⑤ 30분 이상 (7, 1.6%)
- ⑥ 기타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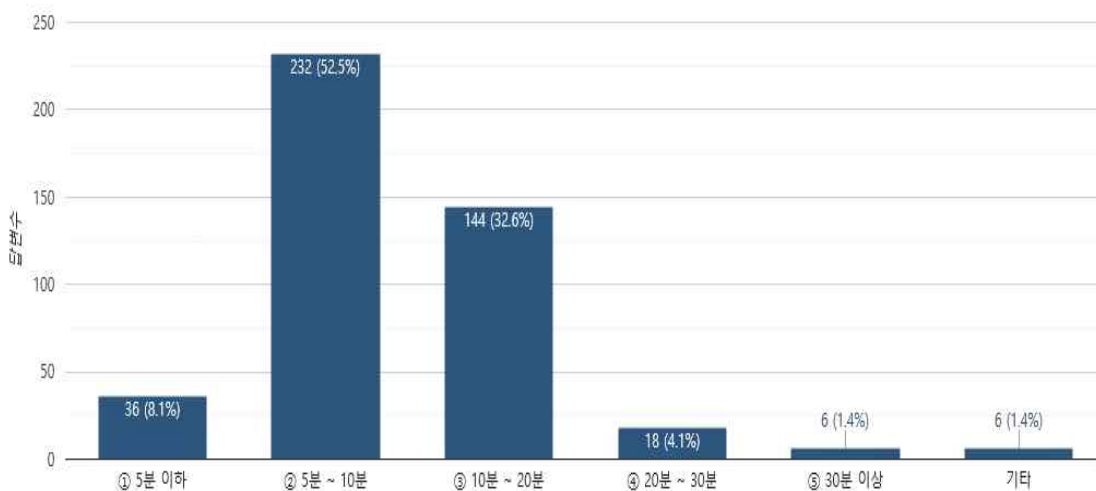
- 사건에 따라 다름, 충실한 서면심리가 더 중요함



[단독재판부]

- ① 5분 이하 (36, 8.1%)
- ② 5분 ~ 10분 (232, 52.5%)
- ③ 10분 ~ 20분 (144, 32.6%)
- ④ 20분 ~ 30분 (18, 4.1%)
- ⑤ 30분 이상 (6, 1.4%)
- ⑥ 기타 (6, 1.4%)

- 사건에 따라 다름, 충실함 서면심리가 더 중요함





● 단독관할 확대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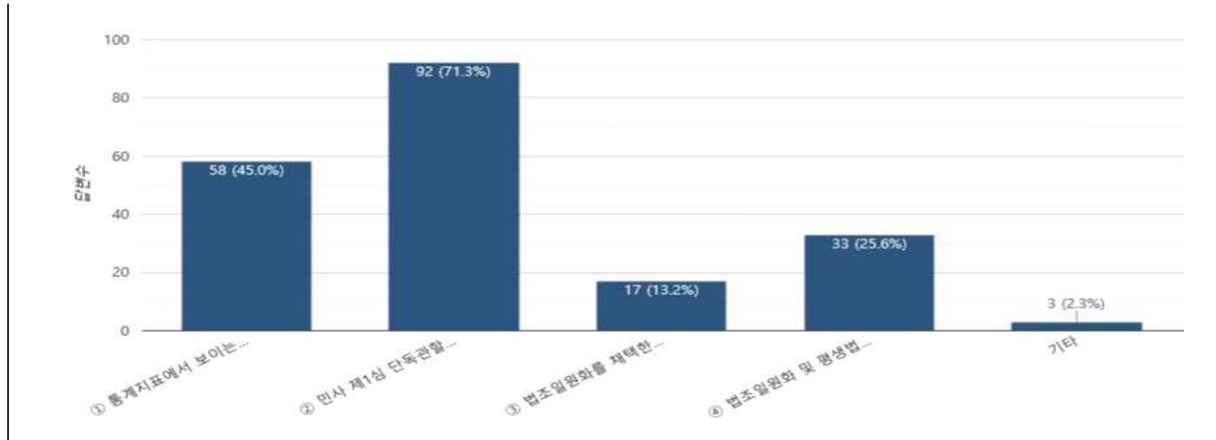
- ① 그렇다. (126, 28.5%)
- ② 그렇지 않다. (271, 61.3%)
- ③ 잘 모르겠다. (45, 10.2%)



●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한 이유(복수 선택 가능)⁴⁵⁾

- ① 통계지표에서 보이는 합의부의 사건부담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1심 단독관할 확대를 통한 재판부 증설임 (58, 45.0%)
- ②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 시 재판부 증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함 (92, 71.3%)
- ③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제1심 단독제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체로 제1심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법제적 관점에서 제1심 단독관할 확대가 바람직함 (17, 13.2%)
- ④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법관의 법조 경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단독 재판부를 늘려 다수의 법관들이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3, 25.6%)
- ⑤ 기타 (3, 2.3%)
 - 법관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소액사건 관할범위는 축소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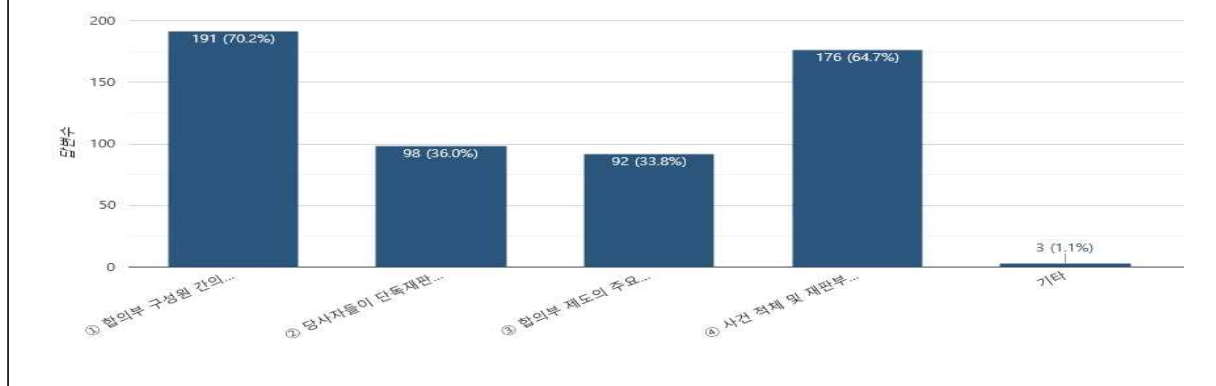
45) 전체 응답자 4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는 129명(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126명 중 125명(미응답자 1명) 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명 및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2명 포함).



● 단독관할 확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복수 선택 가능)46)

- ① 합의부 구성원 간의 상호보완작용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을 간과하거나 독단에 빠져 재판의 객관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 (191, 70.2%)
- ② 당사자들이 단독재판 보다는 합의부에 의한 재판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제1심 단독관할 확대는 재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98, 36.0%)
- ③ 합의부 제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법관 상호간의 경험 공유 및 교육이 약화됨. 경력 법관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합의부 운용을 통한 경험 공유 및 교육 기능은 여전히 필수적임 (92, 33.8%)
- ④ 사건 적체 및 재판부 부족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고, 제1심 단독관할 확대를 차선택책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76, 64.7%)
- ⑤ 기타 (3, 1.1%)

- 단독재판부의 판결서는 지나치게 간략함



46) 전체 응답자 4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는 272명(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271명 외에 '필요하다'고 답변한 1명 포함).



마. 검토 -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 인정

- 단독관할 확대의 규범적·비교법적 근거와 장점, 단독관할 확대를 통한 사건처리 적체 해소의 필요성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음⁴⁷⁾

■ 설문조사 결과 검토

- 응답한 법관의 77.7%, 변호사의 28.5%는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
 - 반대 의견은 법관 17.8%, 변호사 61.3%
 - 설문조사 결과, 재판부 증설을 통해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꼽힘(응답 법관의 83.8%, 변호사의 71.3%)
- 응답한 법관 및 변호사 대다수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지금보다 변론시간을 5~10분 정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 ⇨ 재판부 증설을 통해 변론시간 확보 가능

- 부정설이 지적하는 판단의 객관성과 적정성 저하 우려⁴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반론이 가능함

- 재판부 증설을 통한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로 오히려 충실한 심리가 가능
- 제1심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한 독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더 충실하게 준비되고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주된 만족의 이유였다는 점 참조⁴⁹⁾
- 2015년 합의관할 소가 기준 2억 원 상향 시에도 판단의 객관성과 적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후에도 고등법원 파기율과 지방법원 항소부 파기율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된 바 있음(아래 표 참조)

47) 제19 내지 22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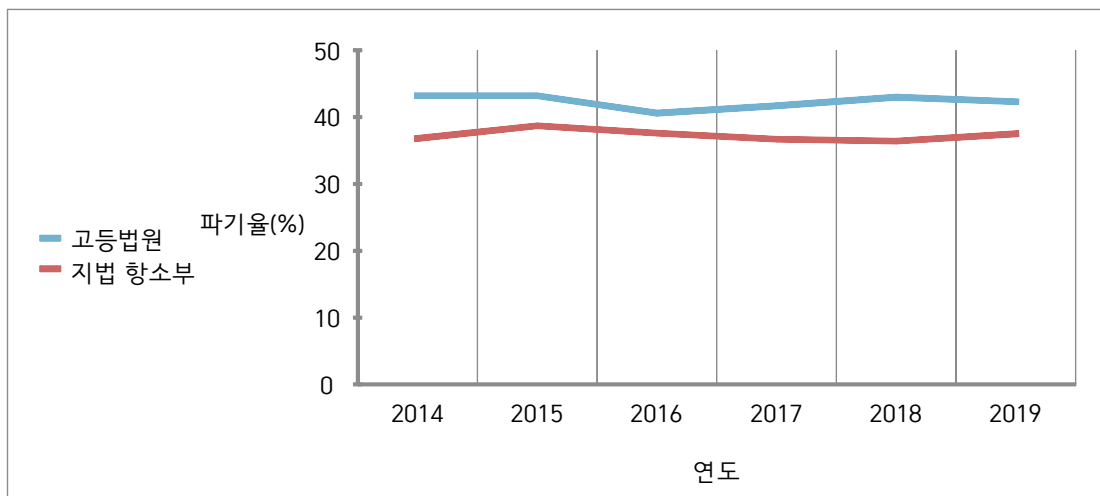
48) 설문조사 결과, 단독관할 확대가 부적절한 주된 이유로 꼽힘(응답 법관의 61.6%, 변호사의 70.2%). 제 29, 35면 참조.

49) 제14면 참조.

[항소심 파기율]

| 연도 | 고등법원 파기율(%) ⁵⁰⁾ | 지방법원 항소부 파기율(%) |
|------|----------------------------|-----------------|
| 2014 | 43.2 | 36.8 |
| 2015 | 43.2 | 38.7 |
| 2016 | 40.6 | 37.6 |
| 2017 | 41.7 | 36.7 |
| 2018 | 43.0 | 36.4 |
| 2019 | 42.3 | 37.5 |

[항소심 파기율 변화]



▣ 부정설이 지적하는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 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반론이 가능함

- 재판부 증설에 따른 부담완화로 법정에서의 추가적인 심리시간 확보 ⇨ 당사자 의견 경청을 통해 절차적 만족감 제고 가능
- 당사자들은 지나치게 젊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조일원화로 경력법관이 임용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됨

50) 파기율: 항소심에서 판결로 파기된 사건의 비율.



■ 변호사회의 의견에 대하여

- 경력법관이 최소한의 법관연수만 받고 바로 제1심 단독사건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⁵¹⁾ ⇨ 경력법관이라 하더라도 법관임용 이후 최소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려 불식 가능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이하 '사건배당 예규'라 함)

○ 제4조의2(단독판사의 보임)

- ② 법관 임용 전 법무관·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의 관계

- 앞서 살펴본 통계는 법관임용 시 법조경력 3년(2013-2017), 5년(2018-2021)이 요구되었던 연도에 해당하는 통계(2014-2019)로서, 법원조직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관 부족 현상에 따른 민사합의부 및 민사단독 재판부의 사건처리 적체가 위 통계보다 심화될 수 있음
- 또한 법조경력이 5년으로 단축되더라도, 최소배석기간 4년을 고려하면 경력이 부족한 법관의 재판장 보임으로 인한 단독재판 부실화의 우려는 크지 않음
- 따라서 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서 본 통계에 기반한 제1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이 감소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인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 11인(만장일치)⁵²⁾

바.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수단

1) 설문조사 결과

51) 제2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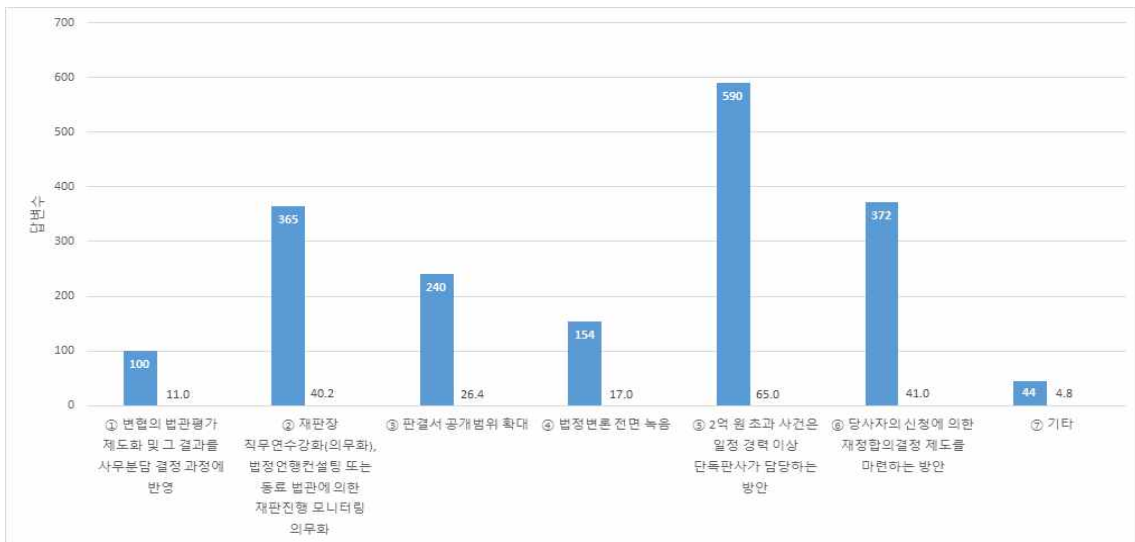
52) 최익구 위원: 보완방안 마련을 전제로 찬성.



■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실효적인 보완수단**(3개까지 선택 가능) ⇨ 이하 설문조사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보완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봄

[법관]⁵³⁾

- ①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화 및 그 결과를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반영 (100, 11.0%)
- ②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법정언행컨설팅 또는 동료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 모니터링 의무화 (365, 40.2%)
- ③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240, 26.4%)
- ④ 법정변론 전면 녹음 (154, 17.0%)
- ⑤ 2억 원 초과 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방안 (590, 65.0%)
- ⑥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372, 41.0%)
- ⑦ 기타 (44, 4.8%)
 - 재판연구원 증원(특히 고액재판부에 배치 필요) / 민사 항소심 경험 유무를 사무분담에 반영 / 단독재판부 3~5개를 재정합의부로 구성 / 원칙적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단독재판부에 대한 항소심의 평가 강화



[변호사]

- ①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화 및 그 결과를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반영 (183, 41.4%)
- ②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법정언행컨설팅 또는 동료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 모니터링 의무화

53)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08명.

터링 의무화 (135, 30.5%)

③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275,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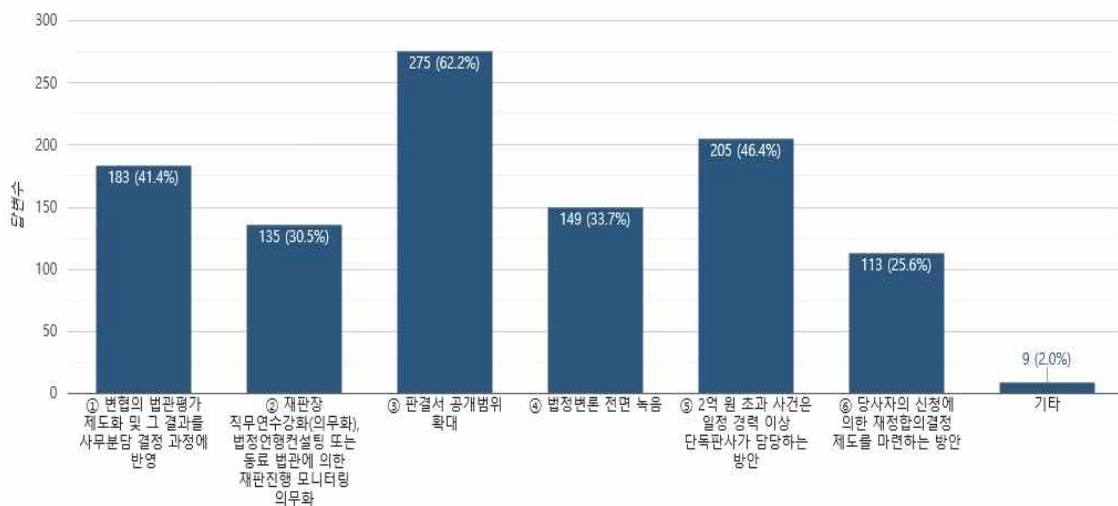
④ 법정변론 전면 녹음 (149, 33.7%)

⑤ 2억 원 초과 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방안 (205, 46.4%)

⑥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113, 25.6%)

⑦ 기타 (9, 2.0%)

- 재판연구원 증원



2)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방안 및 단독판사 보임 기준

■ 고액 단독(2억 원 초과) 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가능

-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방안 설문조사 결과 가장 주요한 보완수단으로 꼽힘(위 설문조사 결과 참조): 법관(65.0%), 변호사(46.4%)
-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고액 단독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당사자의 신뢰 확보 가능
-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법관 및 변호사 모두 ‘법조 경력 12년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을 가장 많이 선택(아래 설문조사 결과 참조): 법관(33.8%), 변호사(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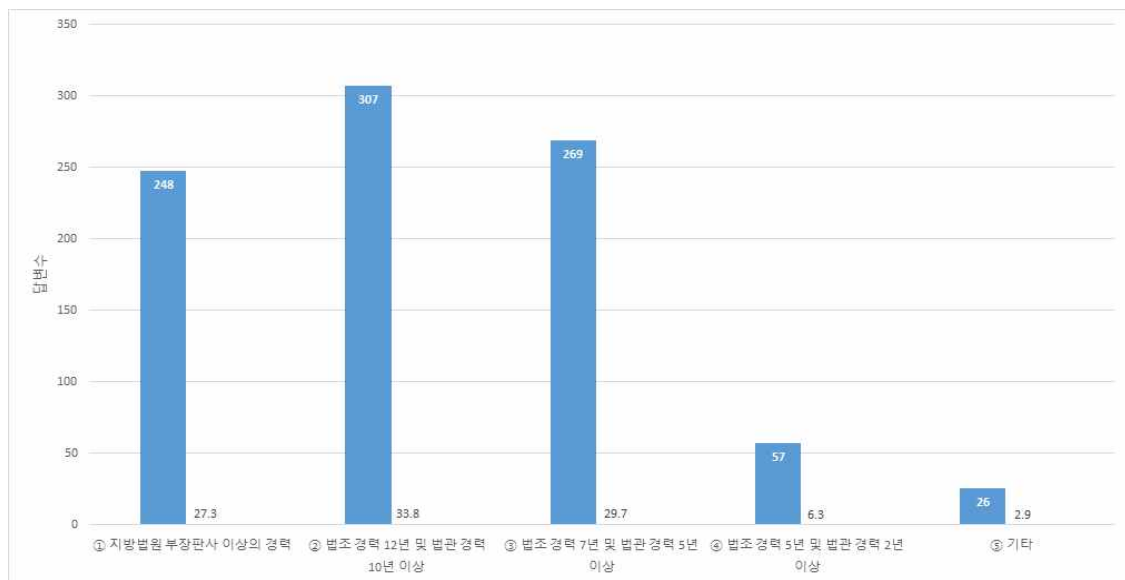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서 법관은 민사단독 업무 경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이, 변호사는 관련사건 처리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 가능(다만 이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고려 사항일 수 있음)
- [설문]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경력 기준

[법관]⁵⁴⁾

- 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 (248, 27.3%)
- ② 법조 경력 12년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 (307, 33.8%)
- ③ 법조 경력 7년 및 법관 경력 5년 이상 (269, 29.7%)
- ④ 법조 경력 5년 및 법관 경력 2년 이상 (57, 6.3%)
- ⑤ 기타 (26, 2.9%)

-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민사단독 업무 경험 3년 이상 / 재판장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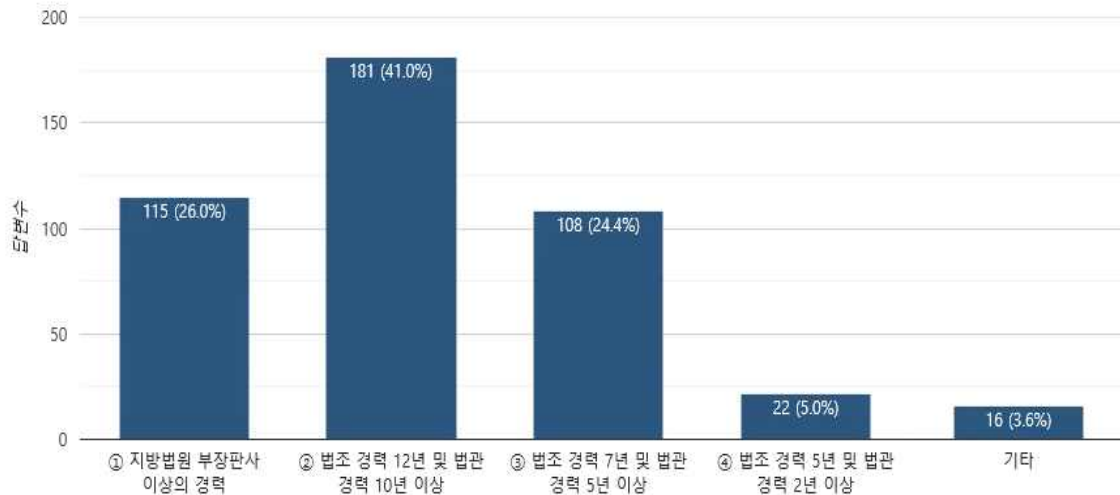
- 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 (115, 26.0%)
- ② 법조 경력 12년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 (181, 41.0%)
- ③ 법조 경력 7년 및 법관 경력 5년 이상 (108, 24.4%)

54)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07명.

④ 법조 경력 5년 및 법관 경력 2년 이상 (22, 5.0%)

⑤ 기타 (16, 3.6%)

- 경력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관련사건 처리 경험을 고려해야 함



- 한편, 단독재판장의 적절한 보임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① 현행과 같이 경력 법관의 단독판사 보임을 위한 최소 배석판사 근무 기간 제도(사건배당 예규 제4조의2⁵⁵⁾, ‘최소한 4년 이상’)를 유지하는 방안(최소 근무 기간을 4년보다 단축하여 유지하는 방안 포함)이 공통 1순위(법관 85.6%, 변호사 62.0%)를, ② 사무분담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서 경력법관에 대한 특례(예: 항소부 또는 합의부 우선 배치, 복수 재판부 겸임 배치 등)를 두는 방안이 공통 2순위(법관 29.6%, 변호사 37.8%)였음(아래 설문조사 결과 참조)

● [설문] 단독재판장의 적절한 보임 기준

[법관]⁵⁶⁾

- ① 현행과 같이 경력법관의 단독판사 보임을 위한 최소 배석판사 근무 기간 제도(「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의2, ‘최소한 4년 이상’)를 유지하는 방안(최소 근무 기간을 4년보다 단축하여 유지하는 방안 포함) (782, 85.6%)
- ② 사무분담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서 경력법관에 대한 특례(예: 항소부 또는 합의부 우

55) 제38면 참조.

56)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14명.

선 배치, 복수 재판부 검임 배치 등)를 두는 방안 (271, 29.6%)

- ③ 경력법관 대상 신임법관연수 기간을 늘리고 커리큘럼(실무연수 등)을 강화하는 방안 (122, 13.3%)
- ④ 경력법관에게만 단독재판장 보임을 위한 추가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1, 10.0%)
- ⑤ 기타 (1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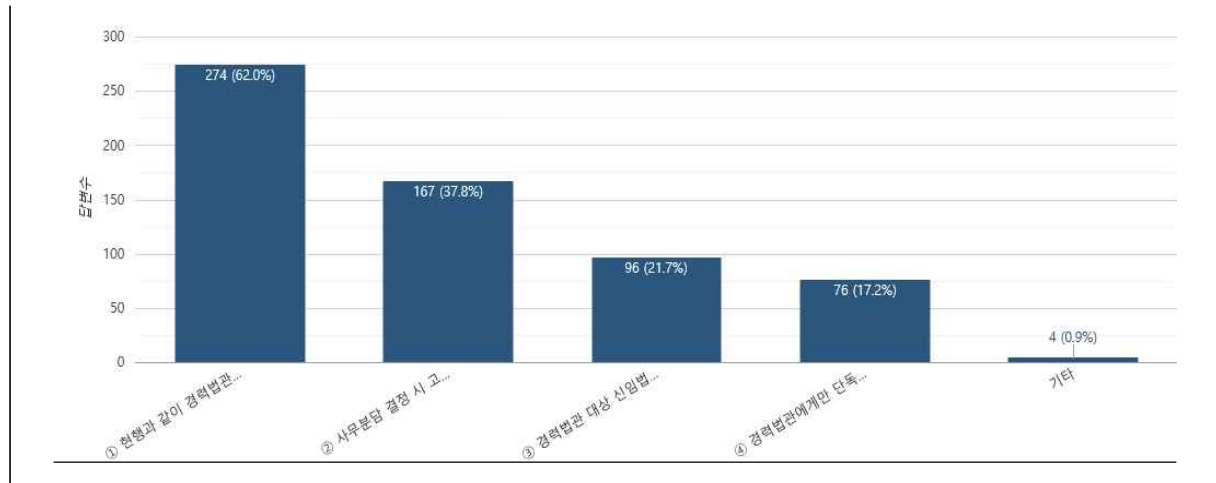
-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배석판사 최소 근무기간을 더 늘려야 함, 민사합의(항소)부 배석 근무 경험이 있어야 단독재판장 보임



[변호사]

- ① 현행과 같이 경력법관의 단독판사 보임을 위한 최소 배석판사 근무 기간 제도(「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의2, '최소한 4년 이상')를 유지하는 방안(최소 근무 기간을 4년보다 단축하여 유지하는 방안 포함) (274, 62.0%)
- ② 사무분담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서 경력법관에 대한 특례(예: 항소부 또는 합의부 우선 배치, 복수 재판부 검임 배치 등)를 두는 방안 (167, 37.8%)
- ③ 경력법관 대상 신임법관연수 기간을 늘리고 커리큘럼(실무연수 등)을 강화하는 방안 (96, 21.7%)
- ④ 경력법관에게만 단독재판장 보임을 위한 추가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6, 17.2%)
- ⑤ 기타 (4, 0.9%)

- 법관 개인의 역량 강화보다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절차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함



■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 법관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 11인(만장일치)

3)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 제도 마련 근거**

- 당사자 모두가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재정합의사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실효적 보완수단 설문(복수선택가능)에서는 법관 2위(41.0%), 변호사 6위(25.6%)였으나⁵⁷⁾, 당사자의 합의부 이송신청권에 관한 설문 결과 응답 법관의 51.6%, 응답 변호사의 73.8%가 위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찬성(아래 설문조사 결과 참조)
- 제1심 단독관할 확대에 관한 2020. 12. 7.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에도 ‘단독관할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⁵⁸⁾

57) 제39, 40면 참조.

58) 제7면 「2020. 12. 7.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참조.



- 다만, 당사자들의 합치된 신청에 재정결정부가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응답 법관의 80.8%가 반대(찬성 18.2%)하고 응답 변호사의 55.0%가 찬성(반대 43.7%) ⇨ 법관 대다수가 반대하고 또한 반대하는 변호사 비율도 상당한 점, 이송신청권의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점,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⁵⁹⁾의 경우에도 재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정결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당사자들의 이송신청기한을 ‘제1회 변론기일 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응답 법관의 73.4%가 찬성(반대 24.0%)하고, 응답 변호사의 61.3%가 찬성(반대 37.6%) ⇨ 이송신청권 남용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기한을 ‘제1회 변론기일 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제1회 변론기일 이후 이송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재정결정부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이 이송신청을 한 경우 재정결정부에의 기록 회부 여부에 관한 단독판사의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결정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독판사에게까지 기록 회부 여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 점,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당사자들의 이송신청권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독판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재량 인정 의견의 논거: 사건배당 예규 제13조 제4항 제1, 2호 사건⁶⁰⁾의 경우 기록 회부에 관한 단독판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되 재정결정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⁶¹⁾, 소송 지연 목적의 신청인 경우 등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조기 종결케 함이 적절한 사안들이 있는 점⁶²⁾, 어차피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촉구’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점

59) 제13면 참조.

60) 제50면 참조.

61) 이송신청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제1심 단독관할 확대의 보완책으로서 이송신청권이 적극 홍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결정부의 업무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

62) 예를 들어, 사실상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사건에서 소송요건에 관한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보정 시간 확보 목적으로 재배당 신청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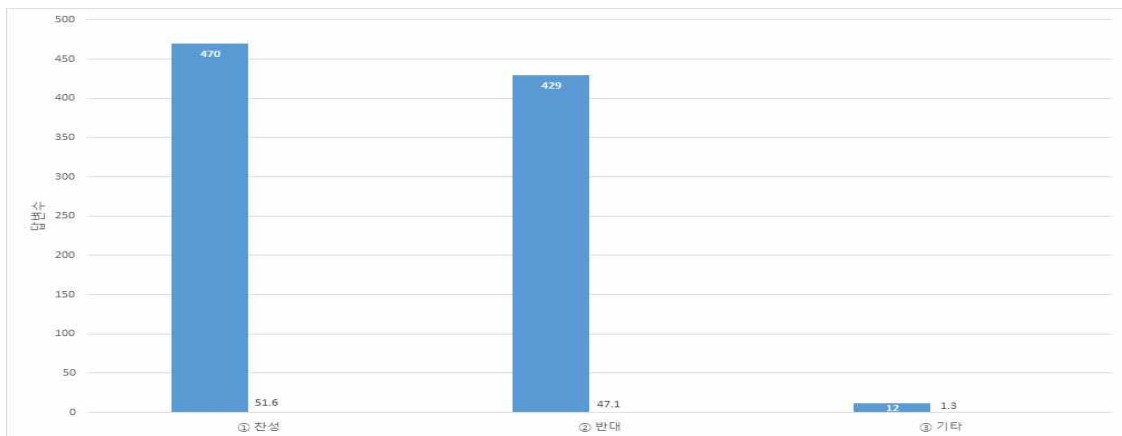
- 합의부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합의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재정합의 결정 사례를 점검하는 방안, 단독재판부가 재정결정부에 회부할 수 있는 월별 건수를 설정하는 방안(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소액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면서 일반재판부에서 집중심리재판부로 일정 유형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있는데, 일반재판부당 월별 재배당 가능 건수를 설정함으로써 재배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기준⁶³⁾도 어느 정도 유형화된 것으로 평가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재정합의 결정례의 축적을 통해 결정 기준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됨

- [설문]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권

1.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권 인정 여부

[법관]⁶⁴⁾

- ① 찬성 (470, 51.6%)
- ② 반대 (429, 47.1%)
- ③ 기타 (12, 1.3%)



[변호사]

63) 예: ① 소액사건이지만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 ② 증인신청이나 감정, 검증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신청 등을 많이 하는 사건(복잡한 증거절차), ③ 쟁점이 간단하더라도 관례나 선례가 없는 사건, ④ 당사자의 숫자가 많은 사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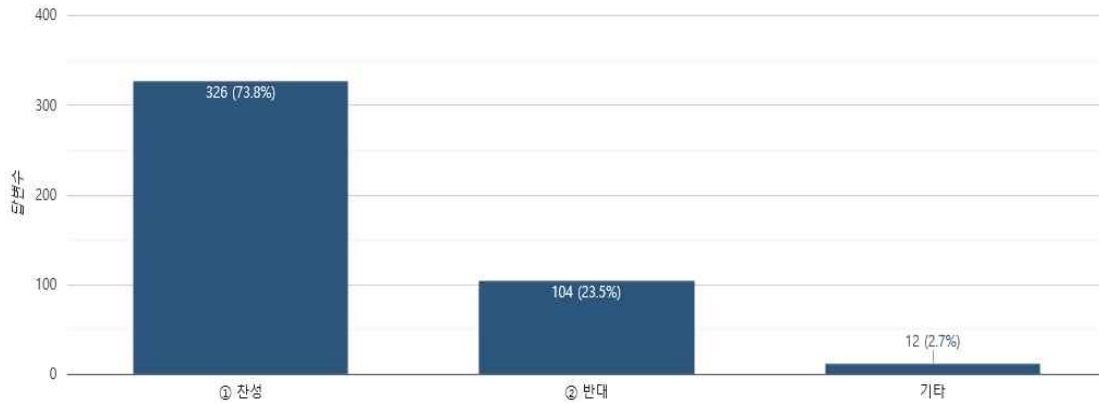
64)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11명.

① 찬성 (326, 73.8%)

② 반대 (104, 23.5%)

③ 기타 (12, 2.7%)

- 일방의 신청으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2. 재정결정부가 당사자들의 신청에 구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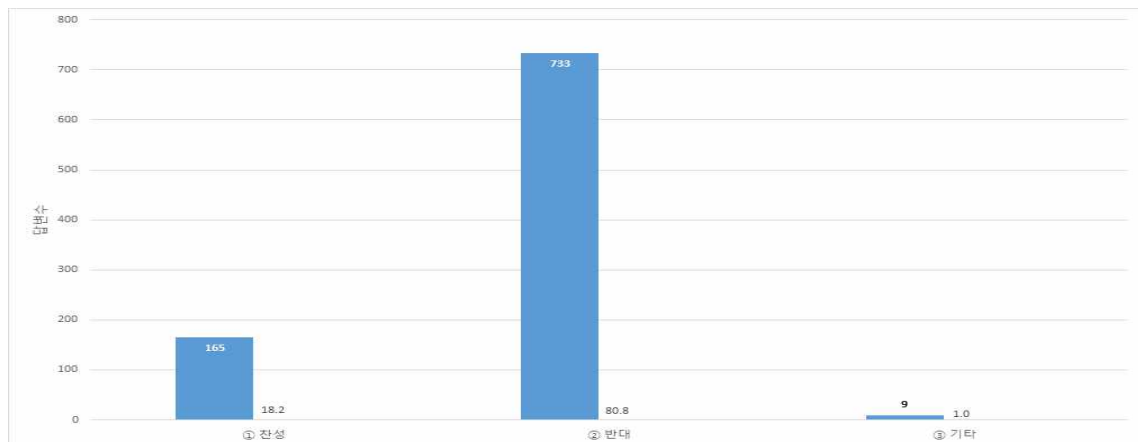
[법관]⁶⁵⁾

① 찬성 (165, 18.2%)

② 반대 (733, 80.8%)

③ 기타 (9, 1.0%)

-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예외적 배제사유를 설정해야 함, 원칙적으로 재량으로 하되 일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받도록 해야 함



65)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07명.

[변호사]

- ① 찬성 (243, 55.0%)
- ② 반대 (193, 43.7%)
- ③ 기타 (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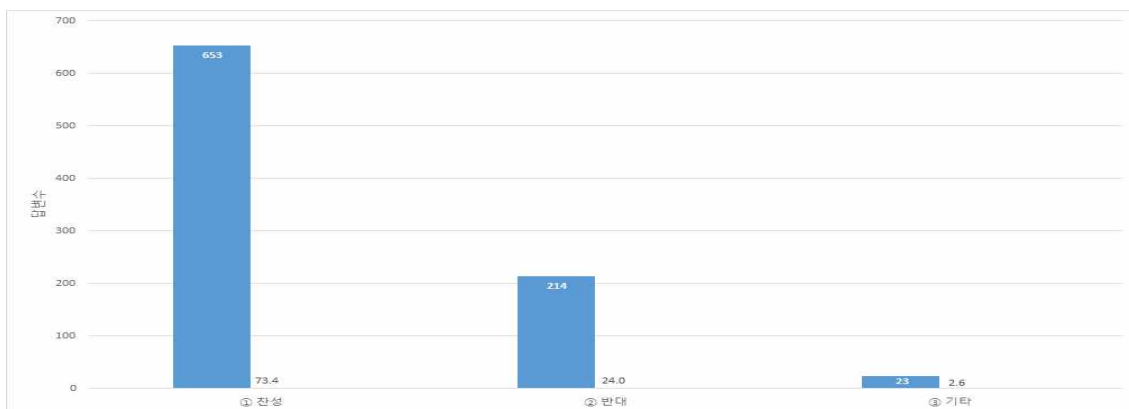


3. 당사자의 이송신청 기한을 ‘1회 변론기일 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법관]⁶⁶⁾

- ① 찬성 (653, 73.4%)
- ② 반대 (214, 24.0%)
- ③ 기타 (23, 2.6%)

- 기한을 더 앞당겨야 함, 2회 변론기일 전으로 제한, 청구변경의 경우에는 ‘청구변경 후 첫 변론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6)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8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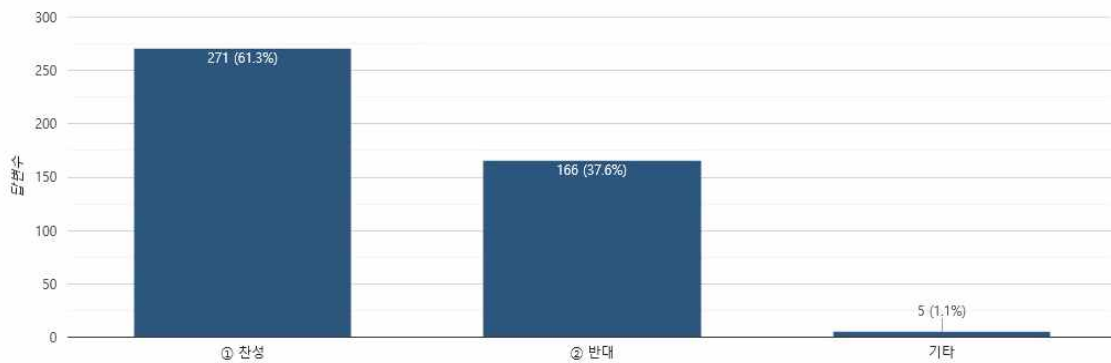
[변호사]

① 찬성 (271, 61.3%)

② 반대 (166, 37.6%)

③ 기타 (5, 1.1%)

- 재판부 배당 전으로 제한, 2회 변론기일 전으로 제한



■ 구체적 개정안 예시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⁶⁷⁾, 사건배당 예규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현행 사건배당 예규]

○ 제12조(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단독사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과 도산사건(이하 "재정합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이하 "재정합의사건"이라 한다)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2.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67)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하 생략)



3.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4.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5.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6.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2.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기록을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 제13조(사건배당 확정 후의 재정합의·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④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

1.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2. 단독으로 심리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⑤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5조 제2항의 회부에 관하여 불결정을 한 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사건배당 예규 개정안]

○ 제12조(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단독사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과 도산사건(이하 "재정합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이하 "재정합의사건"이라 한다)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2.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3.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4.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5.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6.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2.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기록을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 제13조(사건배당 확정 후의 재정합의·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④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여야 한다.**

1.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2. 단독으로 심리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3.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때

⑤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제3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5조 제2항의 회부에 관하여 불결정을 한 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 합의부 이송신청권에 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당사자의 합의부 이송신청권 허용 여부

- 찬성 10인 / 반대 1인

● 당사자의 합의부 이송신청에 기속력을 부여할지 여부

- 반대 11인(만장일치)

● 합의부 이송신청권을 시기적으로 제한(제1회 변론기일 전)할지 여부

- 찬성 10인 / 반대 1인



- 합의부 이송신청권 대상 사건 제한(예: 일정 소가 이상) 여부
 - 찬성 2인 / 반대 9인
- 재정결정부에의 기록 회부에 대한 단독판사의 재량을 인정할지 여부
 - 찬성 4인 / 반대 7인

4)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법정언행컨설팅 또는 동료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 모니터링 의무화

- ▣ 단독관할 확대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위 내용이 법관 설문에서 높은 비율로 3위를 차지하였는데(40.2%),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 제도 마련과 유사한 비율임⁶⁸⁾
- 법관사회에도 승진제도 유무 등과 무관하게 자기 발전과 성취감, 좋은 재판으로 공익에 기여하고 싶은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독관할 확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중 ‘합의부 구성원 간의 상호보완 작용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을 간과하거나 독단에 빠져 재판의 객관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 문항이 법관 설문 2위(61.6%), 변호사 설문 1위(70.2%)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같은 사무분담 법관(이른바 ‘밥조’) 사이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구체적 예시로,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 절차 진행의 균질화를 위하여 적정 1회 변론기일 지정 기간 등 절차 진행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 법원별로 같은 사무분담을 맡은 단독판사들이 분기별로 적정처리건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따라서 재판장 직무연수의 강화(특히 사건관리 노하우의 공유 등) 및 실질화, 법정언행컨설팅의 지원, 동료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68) 제39면 참조.



5) 판결서 공개 확대

-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방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음(62.2%)⁶⁹⁾
- 제21대 국회에서 민사(행정, 특허 포함)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 형태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가결(2020. 12. 8. 개정, 2023. 1. 1. 시행)
 - 미확정 민사 사건 판결서도 현행 확정 판결서와 동일하게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현행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을 통하여 공개 하도록 함
 - [참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2011. 7. 18.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임
 -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하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발 예정 ⇨ 2023. 1. 1. 시행 예정
 - 법률 개정예에 따라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예정(2022년 하반기)
- 형사 '확정판결서' 제공방식을 TEXT-PDF 형식으로 변경해 임의어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여 판결문의 가독성 확대 추진
 - 현재 인터넷 열람 신청 및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판결서(형사 포함)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는 TEXT-PDF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민사 등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행경과를 지켜보고 추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69) 제40면 참조.



6)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제도화

■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방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음(41.4%)⁷⁰⁾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

- 위 위원회의 2021. 6. 9.자 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평가기구(법관 등 참여)를 설치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검토결과를 보고함
-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추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하는 방안과 함께 해당 안건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함

7) 기타 방안

- 민사항소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소액사건 소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 => 8. 기타 논의가 필요한 문제 야.항 참조

6.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

가. [제1안] 질적 분류 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

■ 개요

-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제1심 단독제 원칙을 선언한 것을 실질화하여, 실무에서도 제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하고,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사회적 중요성 등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합의재판을 유지하는 방안
- 사건배당 예규 제12조 제1항⁷¹⁾에 규정된 사건들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

70) 제39, 40면 참조.



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특정 유형의 사건들⁷²⁾을 예외적으로 합의사건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질적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부 사건으로 보는 소가를 설정할 필요성 있음(예: 소가 5억 원 초과)
 - 다만, 사안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합의부 대상 소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소가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 장점

- 합의부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단독 재판부는 비교적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사물관할 배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함

■ 단점

- 질적 분류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에 부담 발생 ⇨ 배당의 공정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변경의 효과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움 ⇨ 질적 분류 기준에 따른 관할 변경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제2안]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 기존의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하되, 소가 기준을 2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

■ 장점

- 기준이 명확하여 관할 구분이 쉽고 배당에 대한 부담이 적음
- 관할 변경에 따른 효과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단점

71) 제49, 50면 참조.

72) 예를 들어, 독일 민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건들을 고려할 수 있음(제11, 12면 참조).



● 현 소가 기준 방식의 단점이 그대로 유지됨

■ 소가 기준 상향의 효과 예측⁷³⁾

-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의 현행 항소심 관할 기준을 유지함을 전제로 함
 - 항소심 관할이 조정될 경우 그에 따른 지방법원 항소부 수의 증·감으로 단독 재판부 증설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법관 수가 많지 않은 지원의 경우 합의부 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원을 기준으로 효과 예측
 - 규모가 큰 지원은 본원과 마찬가지로 합의부 수 조정이 용이하므로, 실제 재판부 증설 효과는 아래 계산보다 클 것으로 보임

● 기초 통계

[합의사건 소가별 분포(전국)]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본원 | 6,513 | 6,862 | 7,003 | 7,144 | 7,526 | 8,024 |
| | | 10.6% ⁷⁴⁾ | 16.5% | 18.4% | 17.9% | 18.5% | 18.5% |
| | 지원 | 2,288 | 2,598 | 2,623 | 2,810 | 3,068 | 3,296 |
| | | 3.7% | 6.2% | 6.9% | 7.1% | 7.5% | 7.6% |
| | 합계 | 8,801 | 9,460 | 9,626 | 9,954 | 10,594 | 11,320 |
| | | 14.3% | 22.8% | 25.3% | 25.0% | 26.0% | 26.1% |
|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 본원 | 3,217 | 3,437 | 3,341 | 3,254 | 3,561 | 3,717 |
| | | 5.2% | 8.3% | 8.8% | 8.2% | 8.7% | 8.6% |
| | 지원 | 1,100 | 1,200 | 1,264 | 1,298 | 1,492 | 1,459 |
| | | 1.8% | 2.9% | 3.3% | 3.3% | 3.7% | 3.4% |
| | 합계 | 4,317 | 4,637 | 4,605 | 4,552 | 5,053 | 5,176 |
| | | 7.0% | 11.2% | 12.1% | 11.4% | 12.4% | 11.9% |

73)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74) 해당 연도 합의사건 총 접수 건수(본원 및 지원 합계)에 대한 비율

75) 2015. 2.까지는 소가 1억~2억 원 사건도 합의사건이었음. 2015. 2. 이후에도 합의부 사건에 대한 반소 사건, 병합 사건 등의 경우 합의부에서 처리되었음.



| | | | | | | | |
|------------------------|----|--------|--------|--------|--------|--------|--------|
|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본원 | 2,308 | 2,173 | 2,334 | 2,279 | 2,360 | 2,498 |
| | | 3.7% | 5.2% | 6.1% | 5.7% | 5.8% | 5.8% |
| | 지원 | 724 | 841 | 904 | 953 | 1,035 | 1,046 |
| | | 1.2% | 2.0% | 2.4% | 2.4% | 2.5% | 2.4% |
| | 합계 | 3,032 | 3,014 | 3,238 | 3,232 | 3,395 | 3,544 |
| | | 4.9% | 7.2% | 8.5% | 8.1% | 8.3% | 8.2% |
| 5억 원 초과 | 본원 | 7,419 | 7,505 | 7,461 | 8,026 | 8,017 | 8,552 |
| | | 12.1% | 18.0% | 19.6% | 20.1% | 19.7% | 19.7% |
| | 지원 | 1,923 | 2,006 | 2,149 | 2,355 | 2,558 | 2,956 |
| | | 3.1% | 4.8% | 5.7% | 5.9% | 6.3% | 6.8% |
| | 합계 | 9,342 | 9,511 | 9,610 | 10,381 | 10,575 | 11,508 |
| | | 15.2% | 22.9% | 25.3% | 26.0% | 25.9% | 26.5% |
| 2억 원 초과 | 본원 | 19,457 | 19,977 | 20,139 | 20,703 | 21,464 | 22,791 |
| | | 31.6% | 48.0% | 53.0% | 51.9% | 52.7% | 52.5% |
| | 지원 | 6,035 | 6,645 | 6,940 | 7,416 | 8,153 | 8,757 |
| | | 9.8% | 16.0% | 18.3% | 18.6% | 20.0% | 20.2% |
| | 합계 | 25,492 | 26,622 | 27,079 | 28,119 | 29,617 | 31,548 |
| | | 41.4% | 64.0% | 71.3% | 70.6% | 72.7% | 72.7% |
| 비재산권상 청구 | 본원 | 2,310 | 2,519 | 2,839 | 3,916 | 3,664 | 4,139 |
| | | 3.8% | 6.1% | 7.5% | 9.8% | 9.0% | 9.5% |
| | 지원 | 1,193 | 1,220 | 1,171 | 1,749 | 1,575 | 1,935 |
| | | 1.9% | 2.9% | 3.1% | 4.4% | 3.9% | 4.5% |
| | 합계 | 3,503 | 3,739 | 4,010 | 5,665 | 5,239 | 6,074 |
| | | 5.7% | 9.0% | 10.6% | 14.2% | 12.9% | 14.0% |
| 2억 원 이하 ⁷⁵⁾ | 본원 | 23,231 | 7,925 | 4,906 | 4,270 | 4,120 | 4,053 |
| | | 37.7% | 19.1% | 12.9% | 10.7% | 10.1% | 9.3% |
| | 지원 | 9,331 | 3,293 | 1,979 | 1,799 | 1,779 | 1,709 |
| | | 15.2% | 7.9% | 5.2% | 4.5% | 4.4% | 3.9% |
| | 합계 | 32,562 | 11,218 | 6,885 | 6,069 | 5,899 | 5,762 |
| | | 52.9% | 27.0% | 18.1% | 15.2% | 14.5% | 13.3% |
| 총 접수건수 | 본원 | 44,998 | 30,421 | 27,884 | 28,889 | 29,248 | 30,983 |
| | | 73.1% | 73.2% | 73.4% | 72.5% | 71.8% | 71.4% |
| | 지원 | 16,559 | 11,158 | 10,090 | 10,964 | 11,507 | 12,401 |
| | | 26.9% | 26.8% | 26.6% | 27.5% | 28.2% | 28.6% |
| | 합계 | 61,557 | 41,579 | 37,974 | 39,853 | 40,755 | 43,384 |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단독사건 소가별 분포(전국)]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1억 원 이하 | 본원 | 186,060 | 166,326 | 149,480 | 114,135 | 114,922 | 123,892 |
| | | 67.3% ⁷⁶⁾ | 63.5% | 60.8% | 57.2% | 56.3% | 57.4% |
| | 지원 | 75,439 | 66,051 | 64,623 | 54,991 | 57,262 | 58,859 |
| | | 27.3% | 25.2% | 26.3% | 27.6% | 28.0% | 27.3% |
| | 합계 | 261,499 | 232,377 | 214,103 | 169,126 | 172,184 | 182,751 |
| | | 94.5% | 88.7% | 87% | 84.8% | 84.3% | 84.6% |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본원 | 6,073 | 17,484 | 19,117 | 17,919 | 18,927 | 19,867 |
| | | 2.2% | 6.7% | 7.8% | 9.0% | 9.3% | 9.2% |
| | 지원 | 1,349 | 6,703 | 7,610 | 7,650 | 8,402 | 8,718 |
| | | 0.5% | 2.6% | 3.1% | 3.8% | 4.1% | 4.0% |
| | 합계 | 7,422 | 24,187 | 26,727 | 25,569 | 27,329 | 28,585 |
| | | 2.7% | 9.2% | 10.9% | 12.8% | 13.4% | 13.2% |
| 총 접수건수 | 본원 | 198,870 | 188,414 | 172,754 | 135,917 | 137,651 | 147,400 |
| | | 71.9% | 71.9% | 70.2% | 68.1% | 67.4% | 68.3% |
| | 지원 | 77,797 | 73,685 | 73,289 | 63,583 | 66,646 | 68,507 |
| | | 28.1% | 28.1% | 29.8% | 31.9% | 32.6% | 31.7% |
| | 합계 | 276,667 | 262,099 | 246,043 | 199,500 | 204,297 | 215,907 |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2015. 2. 합의관할 소가 기준 상향을 검토할 당시 예측된 합의사건 접수건수 감소 효과 및 실제 감소 효과 비교 ⇨ 예측치 대비 실제 합의사건 접수건수 감소 효과는 약 81.9%이므로(아래 표 참조), 이번 연구에서도 위 계수(0.819)를 활용하여 소가 기준 변경 효과를 산정함⁷⁷⁾

76) 해당 연도 단독사건 총 접수 건수(본원 및 지원 합계)에 대한 비율

77) 위 계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가 상승, 사건을 합의사건화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합의사건 통계(지원 포함)]

| | 실질 재판부 수 | 2014년 대비 증감(%) | 접수건수 | 2014년 대비 증감(%) | 2014년 당시 예측치(%) |
|--------------------|-------------|-------------------|--------------------------------|--------------------------------|--------------------|
| 2014년 | 134.974 | - | 61,557 (456) ⁷⁸⁾ | - | -41.3 |
| 2015년 | 115.3615 | -14.5 | 41,579 (360) | -32.4 (78.4) ⁷⁹⁾ | |
| 2016년 | 110.104 | -18.4 | 37,974 (345) | -38.3 (92.7) | |
| 2017년 | 105.534 | -21.8 | 39,853 (378) | -35.2 (85.2) | |
| 2018년 | 105.924 | -21.5 | 40,755 (385) | -33.7 (81.5) | |
| 2019년 | 107.103 | -20.6 | 43,384 (405) | -29.5 (71.4) | |
| 평균 (2015~2019년) | 108.81 | -19.36 | 40,709 (374) | -33.86 (81.9) | |

● 소가 기준 2억 원 ⇨ 3억 원 상향 시 효과 예측

[소가 3억 원 상향 효과 예측(전국 본원)]

| 구분 | 효과 | 계산 |
|---------------------|---------------------------------|---|
| 합의사건 감소율 | 21.2% | ○ 2억 ~ 3억 원 사건: 8,024건, 총 접수건수: 30,983건 ○ $8,024건 \times 0.819^{80)} = 6,571건$ ○ $6,571건 / 30,983건 \times 100\% = 21.2\%$ |
| 단독사건 증가율 | 4.4% | ○ 단독사건 총 접수건수: 147,400건 ○ $6,571건 / 147,400건 \times 100\% = 4.4\%$ |
| 재판부 증설효과 | 재판부 22.2개 증설효과 | ○ 기존 합의부 78.9개, 단독법관 212.1명(실질재판부 수) ○ 합의부 67.8개 ⁸¹⁾ 로 축소[11.1개(14.0%) 감소] ○ 단독법관 33.3명(= 11.1×3) 증가 ○ 재판부 22.2개(= $33.3 - 11.1$) 증설 |
| 단독법관 1인당 접수건수 변화 | 연간 67.5건 감소 월 5.6건 감소 | ○ 조정 전 단독법관 212.1명, 조정 후 245.4명(= $212.1 + 33.3$) ○ 조정 전 연간 694.9건(= $147,400건 / 212.1명$) 접수 ○ 조정 후 연간 627.4건(= $153,971건 / 245.4명$) 접수 |

78)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건수를 실질재판부 수로 나눈 '재판부당 건수'임(이하 같음).

79) 괄호 안의 수치는 예측치(41.3% 감소) 대비 효과(이하 같음).

80) 위에서 산출된 계수를 적용(이하 같음).

81) 조정된 합의사건 수 24,412건(= $30,983건 - 6,571건$)을 2019년 기준 합의재판부당 처리건수(360건)로 나눈 수치 ⇨ 2019년 합의재판부당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처리율 100%가 되는 실질재판부 수(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소가 기준 2억 원 ⇨ 4억 원 상향 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의 입장⁸²⁾

[소가 4억 원 상향 효과 예측(전국 본원)]

| 구분 | 효과 | 계산 |
|---------------------|----------------------------------|--|
| 합의사건 감소율 | 31.0% | ○ 2억 ~ 4억 원 사건: 11,741건, 총 접수건수: 30,983건 ○ $11,741\text{건} \times 0.819 = 9,615\text{건}$ ○ $9,615\text{건} / 30,983\text{건} \times 100\% = 31.0\%$ |
| 단독사건 증가율 | 6.5% | ○ 단독사건 총 접수건수: 147,400건 ○ $9,615\text{건} / 147,400\text{건} \times 100\% = 6.5\%$ |
| 재판부 증설효과 | 재판부 39.2개 증설효과 | ○ 기존 합의부 78.9개, 단독법관 212.1명(실질재판부 수) ○ 합의부 59.3개(= $21,368/360$)로 축소[19.6개(24.8%) 감소] ○ 단독법관 58.8명(= 19.6×3) 증가 ○ 재판부 39.2개(= $58.8 - 19.6$) 증설 |
| 단독법관 1인당 접수건수 변화 | 연간 115.3건 감소 월 9.6건 감소 | ○ 조정 전 단독법관 212.1명, 조정 후 270.9명(= $212.1 + 58.8$) ○ 조정 전 연간 694.9건(= $147,400\text{건}/212.1\text{명}$) 접수 ○ 조정 후 연간 579.6건(= $157,015\text{건}/270.9\text{명}$) 접수 |

● 소가 기준 2억 원 ⇨ 5억 원 상향 시

[소가 5억 원 상향 효과 예측(전국 본원)]

| 구분 | 효과 | 계산 |
|---------------------|-----------------------------------|--|
| 합의사건 감소율 | 37.6% | ○ 2억 ~ 5억 원 사건: 14,239건, 총 접수건수: 30,983건 ○ $14,239\text{건} \times 0.819 = 11,661\text{건}$ ○ $11,661\text{건} / 30,983\text{건} \times 100\% = 37.6\%$ |
| 단독사건 증가율 | 7.9% | ○ 단독사건 총 접수건수: 147,400건 ○ $11,661\text{건} / 147,400\text{건} \times 100\% = 7.9\%$ |
| 재판부 증설효과 | 재판부 50.6개 증설효과 | ○ 기존 합의부 78.9개, 단독법관 212.1명(실질재판부 수) ○ 합의부 53.6개(= $19,322/360$)로 축소[25.3개 감소(32.0%)] ○ 단독법관 75.9명(= 25.3×3) 증가 ○ 재판부 50.6개(= $75.9 - 25.3$) 증설 |
| 단독법관 1인당 접수건수 변화 | 연간 142.7건 감소 월 11.8건 감소 | ○ 조정 전 단독법관 212.1명, 조정 후 288.0명(= $212.1 + 75.9$) ○ 조정 전 연간 694.9건(= $147,400\text{건}/212.1\text{명}$) 접수 ○ 조정 후 연간 552.2건(= $159,061\text{건}/288.0\text{명}$) 접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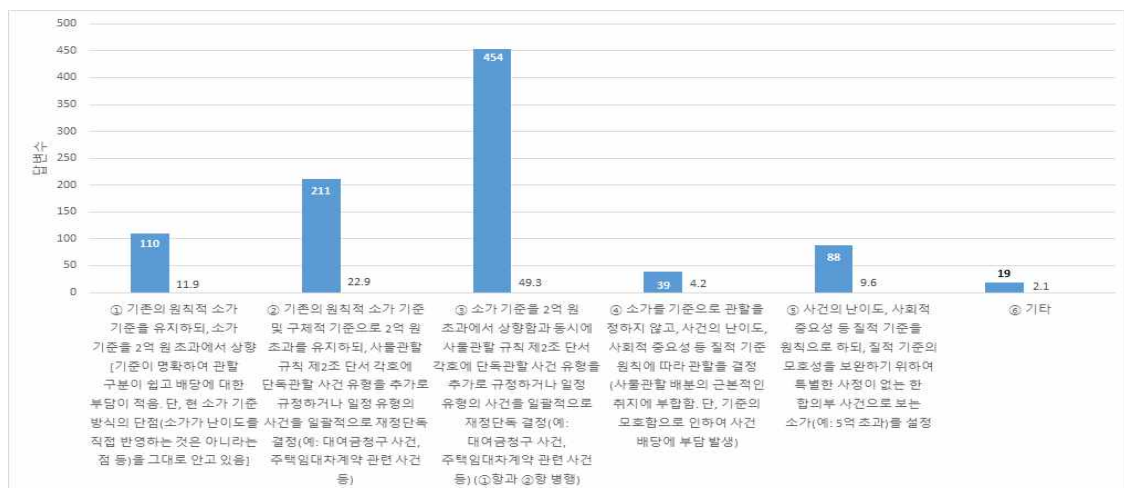
82) 제7면 「2020. 12. 7.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참조.

다. 설문조사 결과

■ 바람직한 단독관할 확대방안

[법관]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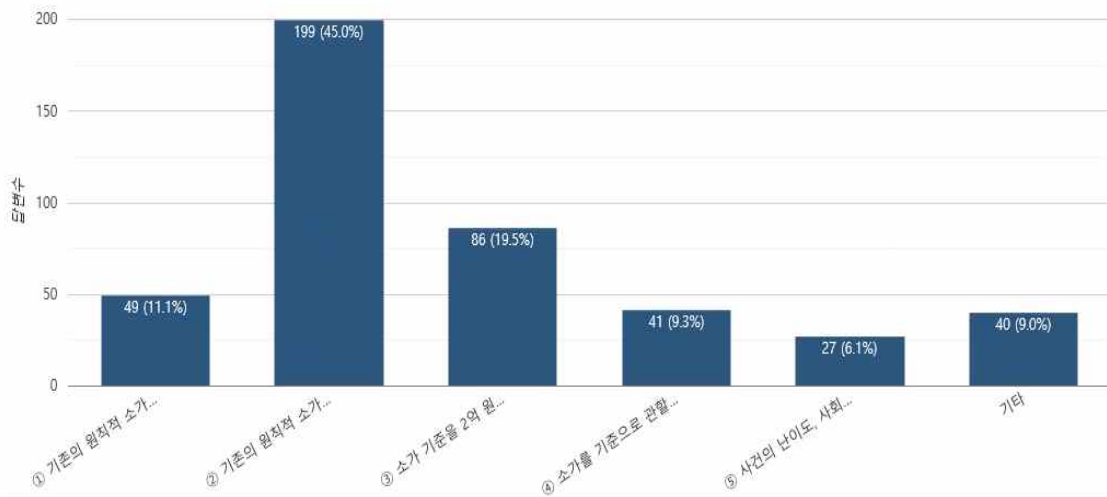
- ① 기존의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하되, 소가 기준을 2억 원 초과에서 상향 (110, 11.9%)
- ② 기존의 원칙적 소가 기준 및 구체적 기준으로 2억 원 초과를 유지하되,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단독관할 사건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거나 일정 유형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재정단독 결정 (211, 22.9%)
- ③ 소가 기준을 2억 원 초과에서 상향함과 동시에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단독관할 사건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거나 일정 유형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재정단독 결정(①항과 ②항 병행) (454, 49.3%)
- ④ 소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 사회적 중요성 등 질적 기준 원칙에 따라 관할을 결정 (39, 4.2%)
- ⑤ 사건의 난이도, 사회적 중요성 등 질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질적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부 사건으로 보는 소가(예: 5억 초과)를 설정 (88, 9.6%)
- ⑥ 기타 (19, 2.1%)
 - 점진적으로 제1심을 전면 단독화하는 것이 적절, 간단한 비재산권 사건에 대한 재정단독 결정 필요



83)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21명.

[변호사]

- ① 기존의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하되, 소가 기준을 2억 원 초과에서 상향 (49, 11.1%)
- ② 기존의 원칙적 소가 기준 및 구체적 기준으로 2억 원 초과를 유지하되,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단독관할 사건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거나 일정 유형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재정단독 결정 (199, 45.0%)
- ③ 소가 기준을 2억 원 초과에서 상향함과 동시에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단독관할 사건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거나 일정 유형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재정단독 결정(①항과 ②항 병행) (86, 19.5%)
- ④ 소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 사회적 중요성 등 질적 기준 원칙에 따라 관할을 결정 (41, 9.3%)
- ⑤ 사건의 난이도, 사회적 중요성 등 질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질적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부 사건으로 보는 소가(예: 5억 초과)를 설정 (27, 6.1%)
- ⑥ 기타 (4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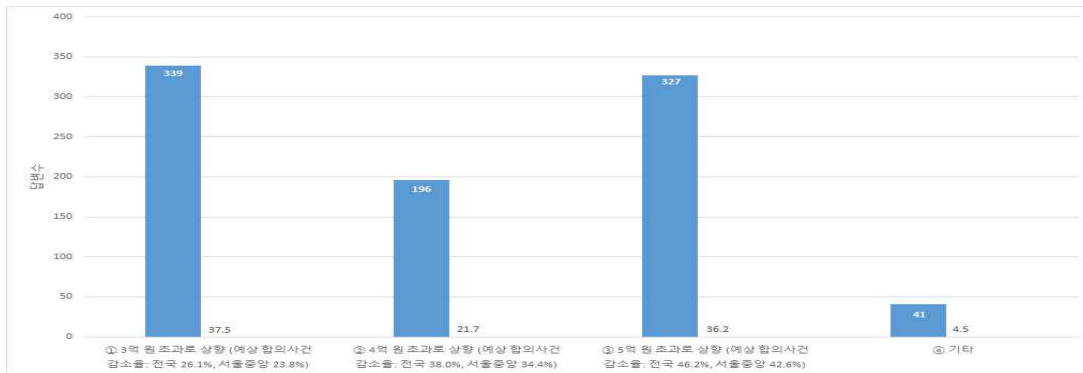
■ 소가 기준에 관한 문항

● 적정한 합의관할 소가 기준

[법관]⁸⁴⁾

- ① 3억 원 초과로 상향 (339, 37.5%)
- ② 4억 원 초과로 상향 (196, 21.7%)
- ③ 5억 원 초과로 상향 (327, 36.2%)
- ④ 기타 (41,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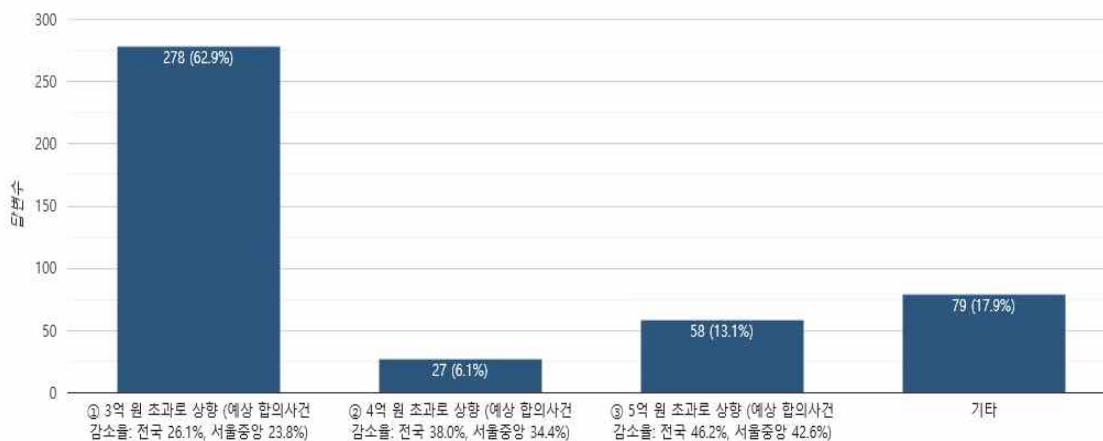
- 단독관할 축소가 타당, 현행 유지, 10억 원 초과로 상향



[변호사]

- ① 3억 원 초과로 상향 (278, 62.9%)
- ② 4억 원 초과로 상향 (27, 6.1%)
- ③ 5억 원 초과로 상향 (58, 13.1%)
- ④ 기타 (79, 17.9%)

- 단독관할 축소가 타당, 현행 유지, 2억 5천만 원 초과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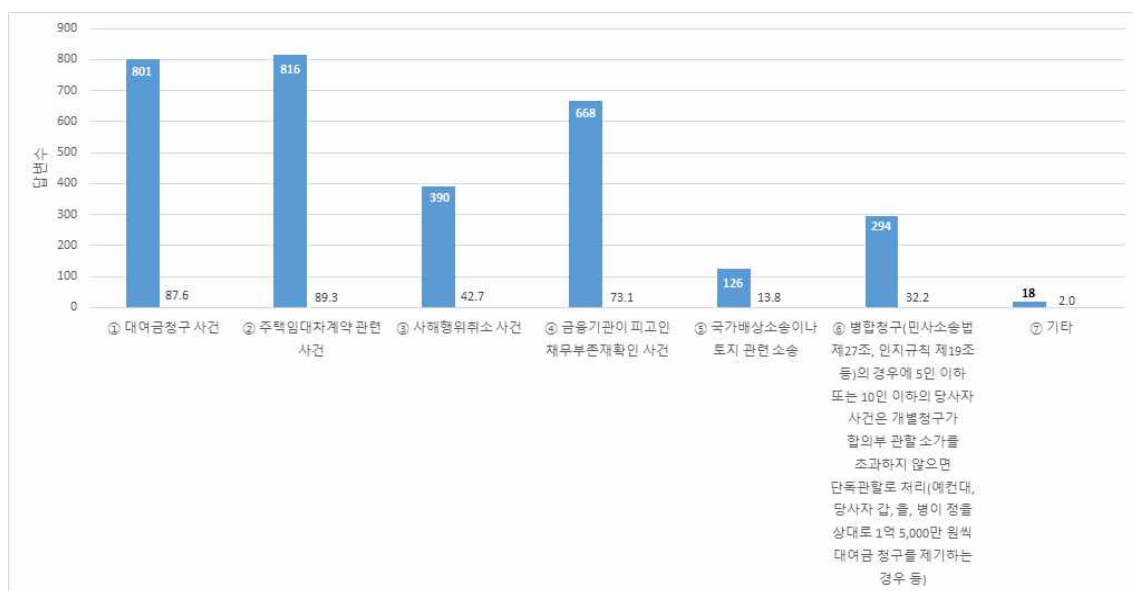
84)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03명. 단독관할 확대에 반대하는 응답자도 설문 대상에 포함됨(변호사도 동일).



-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단독관할 사건으로 추가**하거나, 일률적으로 **재정단독 결정** 대상으로 상정할 만한 사건 유형(복수선택 가능)

[법관]⁸⁵⁾

- ① **대여금청구 사건 (801, 87.6%)**
- ②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816, 89.3%)**
- ③ **사해행위취소 사건 (390, 42.7%)**
- ④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668, 73.1%)**
- ⑤ **국가배상소송이나 토지 관련 소송 (126, 13.8%)**
- ⑥ **병합청구(민사소송법 제27조, 인지규칙 제19조 등)의 경우에 5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의 당사자 사건은 개별청구가 합의부 관할 소가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독관할로 처리(예컨대, 당사자 갑, 을, 병이 정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씩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등) (294, 32.2%)**
- ⑦ **기타 (18, 2.0%)**
 - 신보·기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기관이 원고가 된 양수금 청구 사건, 공사대금·물품대금·매매대금·차용금·소멸시효연장·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주위토지통행권·유치권·건물인도·손해배상(자,산) 사건,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중 일부를 단독사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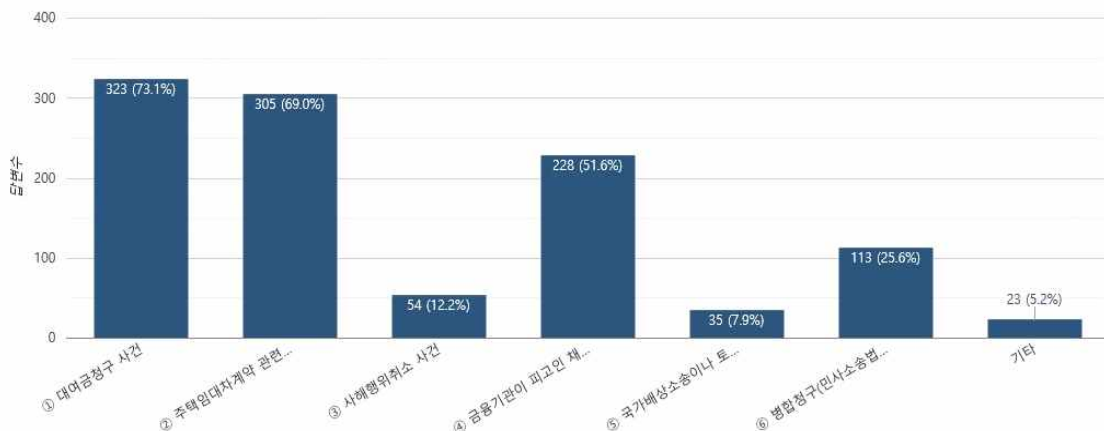


85)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14명.



[변호사]

- ① 대여금청구 사건 (323, 73.1%)
- ②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305, 69.0%)
- ③ 손해행위취소 사건 (54, 12.2%)
- ④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28, 51.6%)
- ⑤ 국가배상소송이나 토지 관련 소송 (35, 7.9%)
- ⑥ 병합청구(민사소송법 제27조, 인지규칙 제19조 등)의 경우에 5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의 당사자 사건은 개별청구가 합의부 관할 소가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독관할로 처리(예컨대, 당사자 갑, 을, 병이 정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씩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등) (113, 25.6%)
- ⑦ 기타 (23, 5.2%)



■ 질적 기준에 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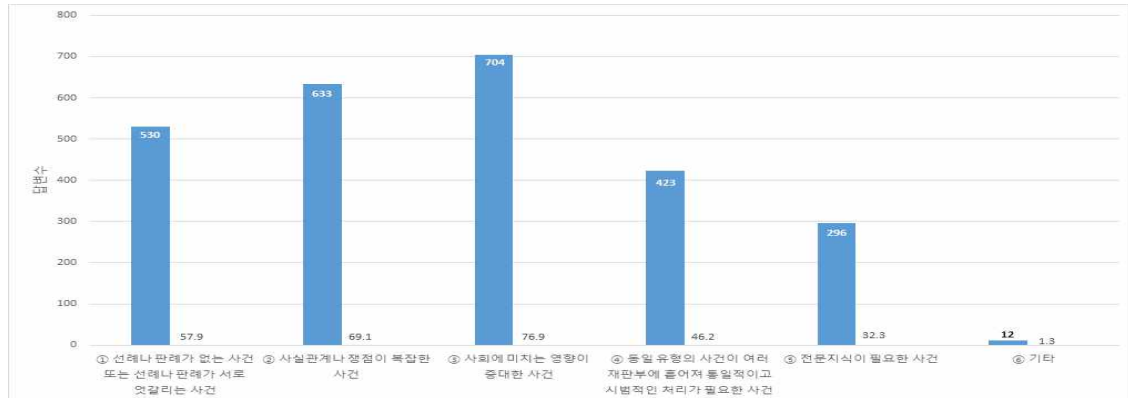
- 합의부 사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3개까지 선택 가능)

[법관]⁸⁶⁾

- ①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530, 57.9%)
- ②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633, 69.1%)
- ③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704,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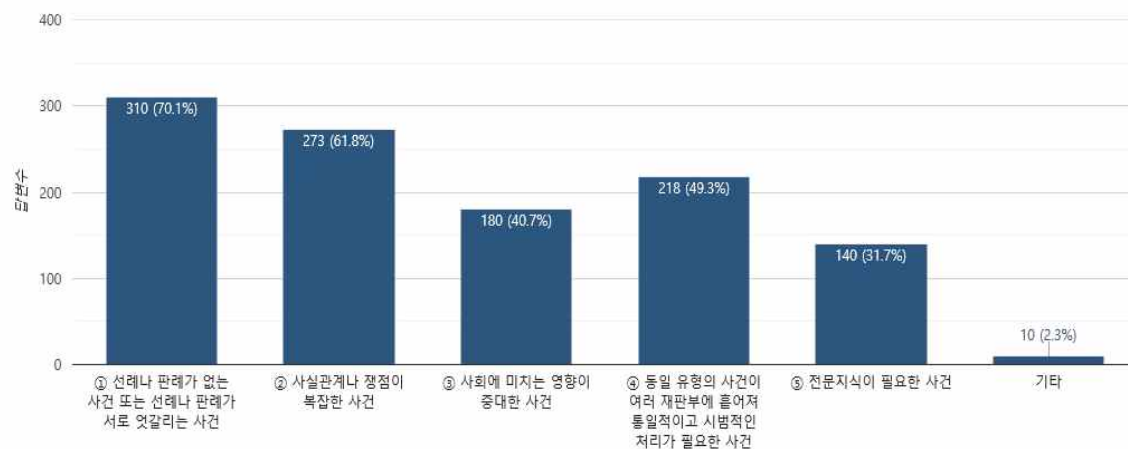
86)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16명(3개 이상 선택한 응답자 포함).

- ④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423, 46.2%)
-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296, 32.3%)
- ⑥ 기타 (12, 1.3%)
- 단독재판부 스스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변호사]

- ①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310, 70.1%)
- ②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273, 61.8%)
- ③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180, 40.7%)
- ④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218, 49.3%)
-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140, 31.7%)
- ⑥ 기타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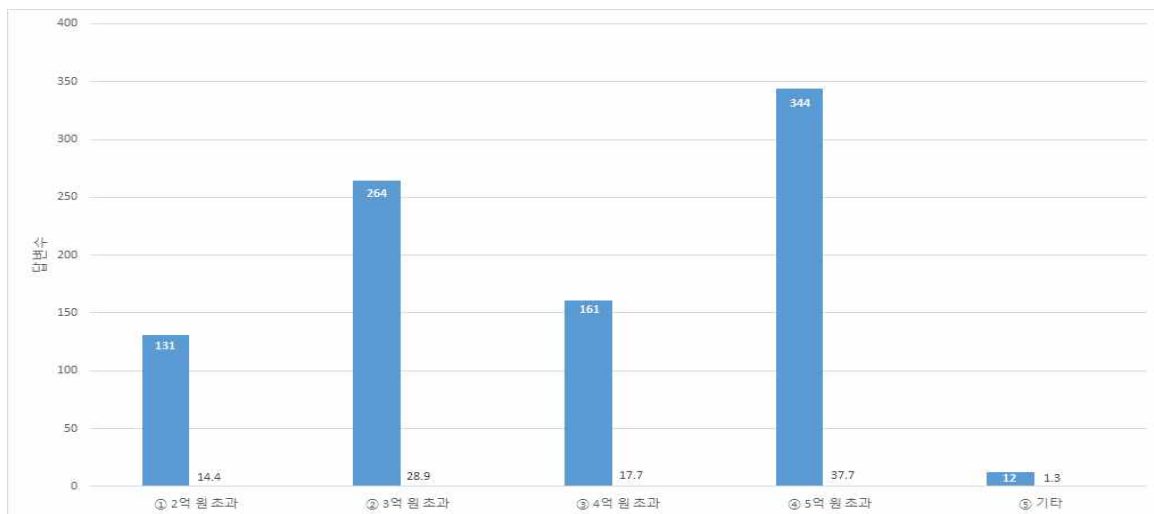


- 질적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할소가 기준

[법관]⁸⁷⁾

- ① 2억 원 초과 (131, 14.4%)
- ② 3억 원 초과 (264, 28.9%)
- ③ 4억 원 초과 (161, 17.7%)
- ④ 5억 원 초과 (344, 37.7%)
- ⑤ 기타 (12, 1.3%)

- 10억 원 초과, 소가 기준 설정은 의미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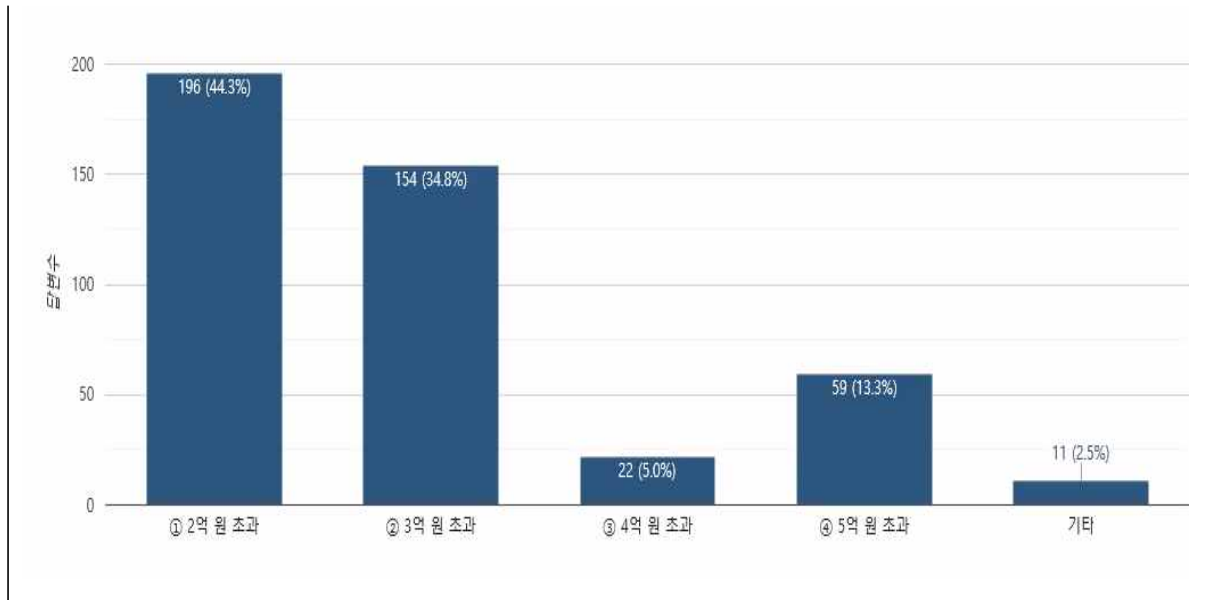


[변호사]

- ① 2억 원 초과 (196, 44.3%)
- ② 3억 원 초과 (154, 34.8%)
- ③ 4억 원 초과 (22, 5.0%)
- ④ 5억 원 초과 (59, 13.3%)
- ⑤ 기타 (11, 2.5%)

- 소가 기준 설정은 부적절함

87)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12명.



라. 검토

1) [단기적 방안]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하되 합의관할 소가 기준을 2억 원에서 상향

■ 질적 분류 기준을 전면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물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효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움 ⇒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응답 법관의 84.1%, 변호사의 75.6%는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함(질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법관은 13.8%, 변호사는 15.4%)⁸⁸⁾

■ 따라서 현행 소가 기준을 유지하되, 합의관할 소가 기준을 2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구체적인 합의관할 소가 기준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소가 상향 효과 예측⁸⁹⁾ 외에 소가 기준별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소가 3억 원 기준

88) 제61, 62면 참조.

89) 제59, 60면 참조.



- 법관 및 변호사를 상대로 한 적정한 합의관할 소가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응답자 수가 많음⁹⁰⁾

[적정한 합의관할 소가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 3억 원 초과 | 4억 원 초과 | 5억 원 초과 |
|-----|---------|---------|---------|
| 법관 | 37.5% | 21.7% | 36.2% |
| 변호사 | 62.9% | 6.1% | 13.1% |

- 그러나 합의사건 감소율이나 합의재판부 축소비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합의부 수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재판부 증설 효과 저하
- 예를 들어, 소가 기준을 3억 원으로 상향하면 합의부 축소비율이 14.0% 정도로 예상되는데(아래 표 참조), 합의부가 2~3개 설치된 각급 법원⁹¹⁾에서 합의부 실질재판부 수 0.28~0.42개를 줄이는 것은 사무분담 현실상 쉽지 않음

[소가 기준 상향에 따른 효과 예측(전국 본원)]

| 소가 기준 | 합의사건 감소율(%) ⁹²⁾ | 합의부 축소비율(%) | 재판부 증설규모(개) |
|-------|----------------------------|-------------|-------------|
| 3억 원 | 21.2 | 14.0 | 22.2 |
| 4억 원 | 31.0 | 24.8 | 39.2 |
| 5억 원 | 37.6 | 32.0 | 50.6 |

- 그에 따라 합의부 해체 및 단독재판부 증설 효과가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단독사건 수 증가로 오히려 단독재판부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수 있음
- 또한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제1심 단독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소가 4억 원 기준

- 2020. 12. 7.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의 입장⁹³⁾
- 소가 기준 3억 원과 5억 원의 절충적 성격을 가짐
- 소가 기준을 4억 원으로 정하고 이에 더하여 일정 사건 유형을 단독화하면, 소가

90) 상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62, 63면 참조.

91) 각급 법원별 합의부 실질재판부 수는 제89, 90면 참조.

92) 제59, 60면 참조.

93) 제7, 8면 참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데 대한 반발을 완화하면서 제1심 단독화 효과를 진작할 수 있음

- 다만, 법관 및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응답자 수가 적음(위 설문조사 결과 참조)

● 소가 5억 원 기준

- 적정한 합의관할 소가 기준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

[적정한 합의관할 소가 기준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적정한 합의관할 소가 기준 | 찬성 위원 수 |
|----------------|-----------|
| 3억 원 초과 | 3인 |
| 4억 원 초과 | 2인 |
| 5억 원 초과 | 6인 |

- 재판부 증설 등 제1심 단독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 법관 및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음(위 설문조사 결과 참조)
- 다만,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도입할 경우 법원 외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증설된 재판부에 배치할 직원 증원 및 법정·조정실 확보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 보완책으로서 단독사건으로 보는 사건 유형의 추가

-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단독관할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은 대여금청구 사건,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등을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⁹⁴⁾
- 설문조사 결과, 응답 법관의 72.2%, 변호사의 64.5%는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단독관할 사건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거나 일정 유형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재정단독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⁹⁵⁾

94) 제7, 8면 참조.



- 또한 단독관할로 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응답 법관과 변호사 모두 대여금청구 사건,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전체 합의사건 중 위 사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1% 정도임(아래 표 참조)

[2019년 민사합의사건 사건유형별 접수 비중(전국 법원)]

| 사건 유형 ⁹⁶⁾ | 접수건수(건) | 비중(%) |
|--|---------------|--------------|
| 대여금청구 사건 | 2,765 | 6.4 |
|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⁹⁷⁾ | 642 | 1.5 |
|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⁹⁸⁾ | 101 | 0.2 |
| 사해행위취소 사건 | 928 | 2.1 |
| 국가배상사건 | 256 | 0.6 |
| 비재산권상 청구 사건 | 6,074 | 14 |
| 전체 접수건수 | 43,384 | 100.0 |

- 그 밖에 단독관할로 추가할 수 있는 사건 유형 예시
 - 사해행위취소 사건
 - 병합청구(민사소송법 제27조, 인지규칙 제19조 등)의 경우에 5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의 당사자 사건은 개별청구가 합의부 관할 소가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독관할로 처리하는 방안(예컨대, 당사자 갑, 을, 병이 정을 상대로 각 1억 5,000만 원씩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경우 등)

2) [장기적 방안] 질적 분류 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95) 제61, 62면 참조.

96) 사건 접수 시 분류한 ‘사건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함(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취소 등).

97) 임대차보증금 이외의 계약 관련 분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

98) 사건코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중 피고 당사자명에 다음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를 집계[키워드: 은행, बैं크, 카드, 농협(또는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또는 신용협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증권, 금융, 우체국, 대부, 보험, 신탁, 유동화, 투자, 캐피탈, 신용보증, 자산관리, 국민행복기금].



- 장기적으로는, 질적 분류 기준을 전면 적용하여 민사 제1심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하고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 등을 예외적으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획일적인 소가 기준이 아니라 사안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질적 차이에 따라 사건을 구분하므로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사건분류가 가능하고, 소가에 따른 분류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민사 제1심 단독제를 원칙으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사물관할 규칙 제2조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안임 ⇒ 합의사건은 예외적으로 재정합의부에서 소수의 사건만을 담당하도록 함
- 사건 배당의 어려움 등 예상되는 단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기한 재정합의 결정례의 축적 등을 통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합의부 사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⁹⁹⁾
 -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76.9%),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69.1%),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57.9%)
 - 변호사: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70.1%),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61.8%), 재판부 사이의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49.3%)

마. 위원회 표결 결과

-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하되, 소가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 찬성 9인 / 반대 2인
 - 위 반대 2인은 질적 분류 기준을 전면적으로 즉시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함
- 소가 상향 시 기준 금액
 - 3억 원(3인) / 4억 원(2인) / 5억 원(6인)

99) 제65, 66면 참조.



- **보완책으로서 단독사건으로 보는 사건 유형(대여금청구 사건,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추가 필요 여부**

- **찬성 11인(만장일치)**

- **장기적 방안으로서 질적 분류 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

- **찬성 10인 / 반대 1인**

바.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개정안

- 앞서 본 논의에 따라, **사물관할 규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개정 전]

○ 사물관할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개정안]

○ 사물관할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대여금청구 사건

5. 주택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사건

6.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7.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한편,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사물관할 규칙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사물관할 변경에 대해 별도의 논의 필요

○ 사물관할 규칙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 2의 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7. 제1심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 조정

가. 개요

■ 관련 규정

○ 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 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구 사물관할 규칙(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2015. 2. 민사 제1심 합의관할 소가 기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위 구 사물관할 규칙 제4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소가 1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하였으나, 위 규정이 2016. 9. 6. 개정¹⁰⁰⁾으로 삭제되어, 이후 고등법원은 고액단독사건(소가 1억 원 초과)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음

● 항소심 관할 구조 단순화 취지

■ 제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부 및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함

나. 기초 통계

■ 고등법원 접수·처리·미제건수 등 분석

● 접수·처리·미제건수 전반적인 감소 추세(아래 표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고등법원 관할 소가 기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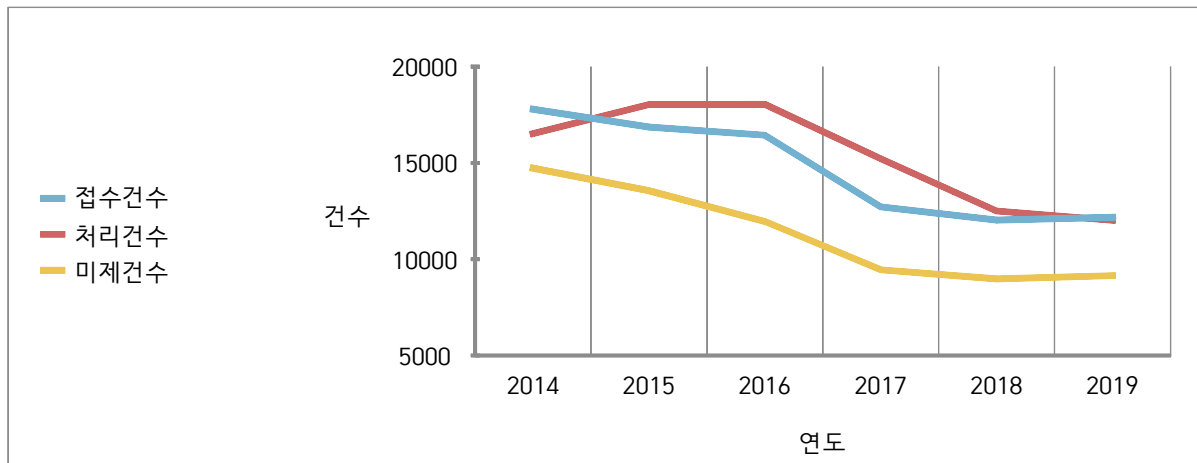
100) 시행일은 2016. 10. 1.이고, 시행 후 항소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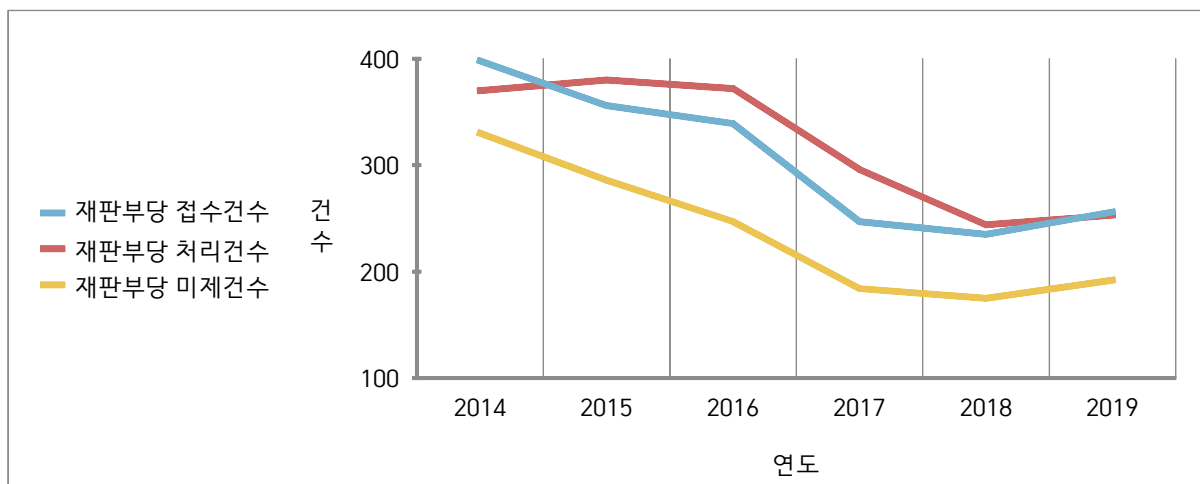
[고등법원 접수·처리·미제건수 등(전국)]

| | 실질 재판부 수 | 접수 건수 | 재판부당 접수건수 | 처리 건수 | 재판부당 처리건수 | 미제건수 | 재판부당 미제건수 | 미제 분포지수 |
|-------|-------------|----------|--------------|----------|--------------|--------|--------------|------------|
| 2014년 | 44.70 | 17,792 | 398 | 16,518 | 370 | 14,730 | 330 | 64.3 |
| 2015년 | 47.41 | 16,864 | 356 | 18,034 | 380 | 13,561 | 286 | 62.0 |
| 2016년 | 48.49 | 16,443 | 339 | 18,039 | 372 | 11,964 | 247 | 63.4 |
| 2017년 | 51.45 | 12,717 | 247 | 15,227 | 296 | 9,454 | 184 | 60.3 |
| 2018년 | 51.24 | 12,032 | 235 | 12,502 | 244 | 8,984 | 175 | 59.7 |
| 2019년 | 47.60 | 12,184 | 256 | 12,021 | 253 | 9,147 | 192 | 63.2 |

[고등법원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전국)]



[고등법원 재판부당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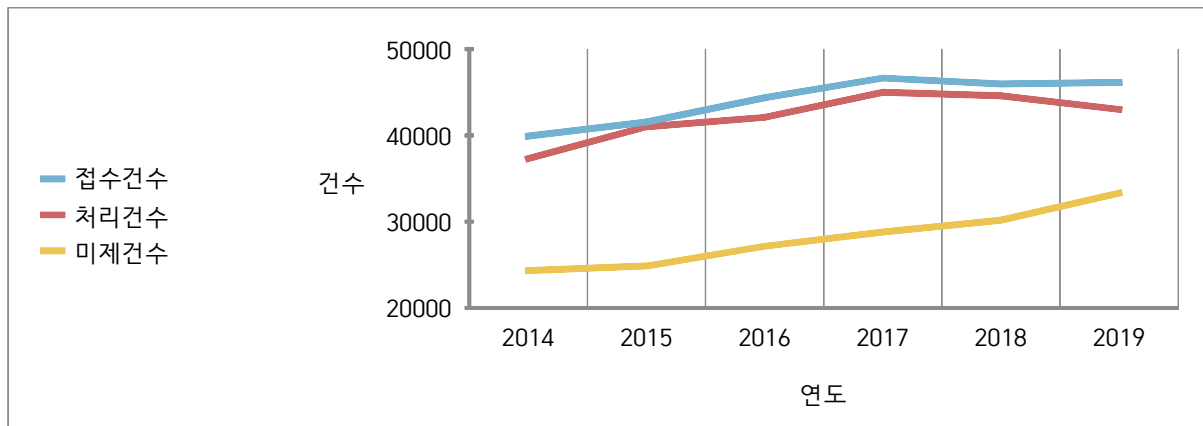
▣ 지방법원 항소부 접수·처리·미제건수 분석

- 접수·처리·미제건수 증가 추세 ⇨ 다만, 재판부당 통계는 실질재판부수 변동에 영향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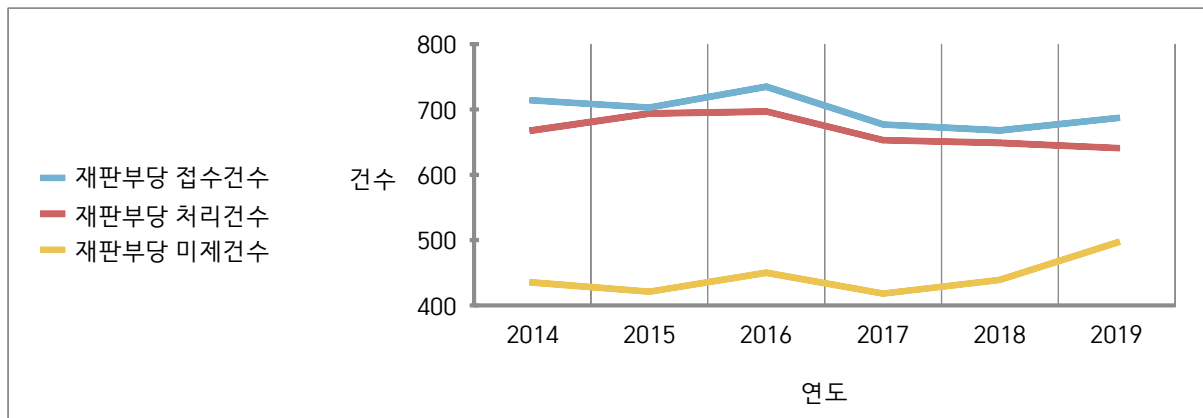
[지방법원 항소부 접수·처리·미제건수 등(전국)]

| | 실질 재판부 수 | 접수 건수 | 재판부당 접수건수 | 처리 건수 | 재판부당 처리건수 | 미제건수 | 재판부당 미제건수 | 미제 분포지수 |
|-------|-------------|----------|--------------|----------|--------------|--------|--------------|------------|
| 2014년 | 55.887 | 39,926 | 714 | 37,322 | 668 | 24,323 | 435 | 85.8 |
| 2015년 | 59.074 | 41,557 | 703 | 41,011 | 694 | 24,869 | 421 | 83.3 |
| 2016년 | 60.37 | 44,373 | 735 | 42,085 | 697 | 27,157 | 450 | 84.9 |
| 2017년 | 68.9 | 46,655 | 677 | 44,998 | 653 | 28,814 | 418 | 81.3 |
| 2018년 | 68.765 | 45,968 | 668 | 44,601 | 649 | 30,180 | 439 | 82.8 |
| 2019년 | 67.135 | 46,144 | 687 | 43,022 | 641 | 33,303 | 496 | 79.8 |

[지방법원 항소부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전국)]



[지방법원 항소부 재판부당 접수·처리·미제건수 변동(전국)]





■ **항소심 관할 기준 소가 변경 시 접수건수 예측**(2019년 통계 기준)

[고등법원에서 소가 **3억 원** 초과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 | 접수건수(건) | 3억 원으로 조정 후(건) | 증감(건) | 재판부당 접수건수(건) | 3억 원으로 조정 후(건) | 증감(건) |
|--------|---------|-------------------|------------------|-----------------|-------------------|---------------|
| 고등법원 | 12,184 | 10,020 | ▼2,164 (▼18%) | 256 | 210 | ▼46 (▼18%) |
| 지법 항소부 | 46,144 | 48,308 | ▲2,164 (▲5%) | 687 | 719 | ▲32 (▲5%) |

[고등법원에서 소가 **4억 원** 초과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 | 접수건수(건) | 4억 원으로 조정 후(건) | 증감(건) | 재판부당 접수건수(건) | 4억 원으로 조정 후(건) | 증감(건) |
|--------|---------|-------------------|------------------|-----------------|-------------------|---------------|
| 고등법원 | 12,184 | 8,859 | ▼3,325 (▼27%) | 256 | 186 | ▼70 (▼27%) |
| 지법 항소부 | 46,144 | 49,469 | ▲3,325 (▲7%) | 687 | 737 | ▲50 (▲7%) |

[고등법원에서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 | 접수건수(건) | 5억 원으로 조정 후(건) | 증감(건) | 재판부당 접수건수(건) | 5억 원으로 조정 후(건) | 증감(건) |
|--------|---------|-------------------|------------------|-----------------|-------------------|---------------|
| 고등법원 | 12,184 | 7,958 | ▼4,226 (▼35%) | 256 | 167 | ▼89 (▼35%) |
| 지법 항소부 | 46,144 | 50,370 | ▲4,226 (▲9%) | 687 | 749 | ▲62 (▲9%) |

다. **[제1안]** 고등법원에서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하는 방안

- 2016. 9. 6. 삭제하였던 구 사물관할 규칙 제4조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서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물관할 규칙 제4조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 사물관할 규칙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제1심 **단독관할 확대**로 인한 당사자의 우려와 불신(판단의 객관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 독단에 빠질 우려, 합의재판보다 신중한 판단에 불리 등)을 **불식하기 위해 항소심의 고등법원 관할 유지 필요**

■ 지방법원 항소부의 접수·미제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지방법원 항소부가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의 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 제1심 합의부 수 감소에 따른 재판부 증설 효과가 반감됨**(아래 표 참조)

[소가 5억 원 기준 증설 필요 항소재판부 수 예측(2019년 통계 기준)]

| | 접수건수 (건) | 5억 원으로 조정 후(건) | 증감(건) | 실질재판부 수(개) | 5억 원으로 조정 후(개) | 증설 필요 재판부 수(개) |
|--------|-------------|-------------------|-------------------|---------------|------------------------|-------------------|
| 지법 항소부 | 46,144 | 50,370 | ▲4,226 (▲9.1%) | 67.13 | 73.23 (67.13×1.091) | ▲6.10 |

라. [제2안] 고등법원에서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하는 방안

■ 현행 사물관할 규칙을 유지하여, **고등법원에서 소가 5억 원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 **항소심 관할 구조 단순화 및 혼선 방지** 취지

■ 지방법원 항소부가 점차 부장판사 3인의 대등합의부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 항소심의 재판 역량이 증대됨**

■ 국민의 법원 접근성 제고

마. [제3안] 원칙적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하는 방안



■ 아래의 입법례처럼 독일, 일본, 프랑스 모두 제1심 재판부가 단독이든 합의이든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원칙이고, 다만 경미한 일부 사건에 한하여 항소심을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을 뿐임 ⇒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의 지방법원 항소부 제도는 워낙 사건수가 많고 항소율이 높은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항소심을 두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즉, 동일한 법원 내에서 인적 구성만 달리하여 1심재판과 2심재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소임

■ 독일의 사례

- 지방법원(Landgericht)에서 관할하는 사건은 모두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이 항소심을 관할함
- 단, 소송물가액 10,000마르크 이하의 재산권 분쟁 사건, 주거 기타 건물에 대한 임대차사건, 여행자와 객점주인·선원·여행안내인 사이의 숙박료·운임·여행자의 운송·소지품의 상실훼손 등에 관한 분쟁, 공시최고사건 등을 처리하는 구(區)법원(Amtsgericht) 사건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Landgericht)이 중심으로 처리함

■ 일본의 사례

- 합의/단독을 불문하고, 지방재판소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권은 고등재판소가 가짐(재판소법 제16조 1호)
- 간이재판소에 대한 항소는, 간이재판소의 판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외하고, 지방재판소에서 재판권을 가지고(재판소법 제24조 3호), 지방재판소의 합의체에서 취급함(재판소법 제26조 3항)

■ 프랑스의 사례

- 합의/단독을 불문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권은 항소법원이 가짐



구체적인 기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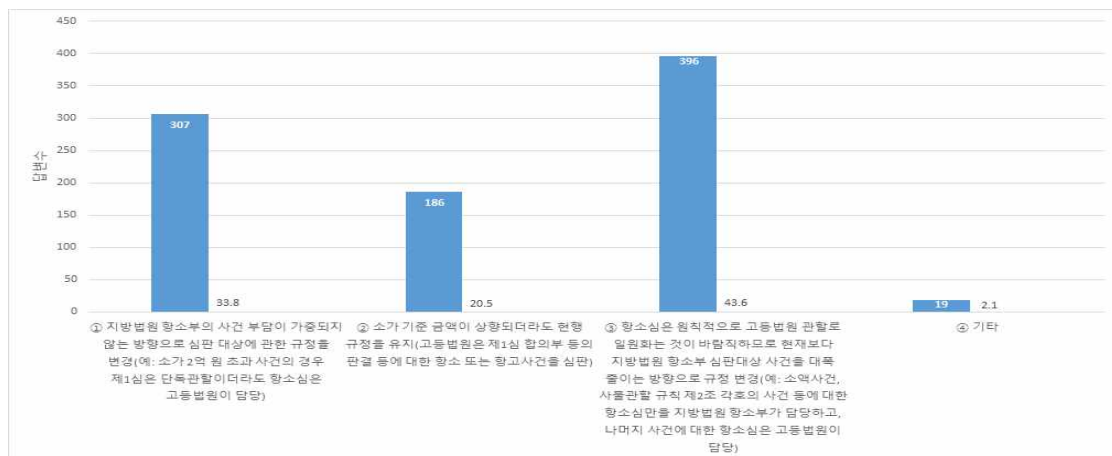
- 지방법원 항소부: 소액사건에 대한 항소사건,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만을 담당
- 고등법원: 나머지 모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 담당

바. 설문조사 결과

제1심 단독관할 확대 시 적절한 항소심 관할 배분

[법관]¹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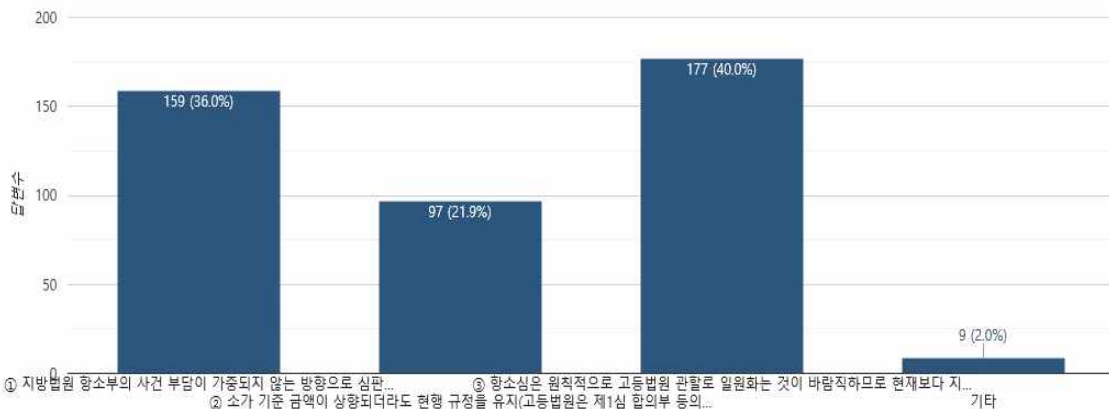
- ① 지방법원 항소부의 사건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판 대상에 관한 규정을 변경(예: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의 경우 제1심은 단독관할이더라도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 (307, 33.8%)
- ② 소가 기준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현행 규정을 유지(고등법원은 제1심 합의부 등의 판결 등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 (186, 20.5%)
- ③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보다 지방법원 항소부 심판대상 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 변경(예: 소액사건,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호의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만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 (396, 43.6%)
- ④ 기타 (19, 2.1%)
 - 항소법원 신설이 타당함, 지방법원 항소부 업무경감 필요



101)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08명.

[변호사]

- ① 지방법원 항소부의 사건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판 대상에 관한 규정을 변경(예: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의 경우 제1심은 단독관할이더라도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 (159, 36.0%)
- ② 소가 기준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현행 규정을 유지(고등법원은 제1심 합의부 등의 판결 등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 (97, 21.9%)
- ③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보다 지방법원 항소부 심판대상 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 변경(예: 소액사건,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호의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만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 (177, 40.0%)
- ④ 기타 (9, 2.0%)
 - 항소법원 신설이 타당함



사. 검토

1) [단기적 방안] 고등법원에서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하는 방안

- 새로운 제1심 관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항소심의 관할 기준 변경은 시차를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도 제1심 합의관할 기준 소가 상향 시 사물관할 규칙을 통해 일정 기간 항소심 관할 기준을 유지하였음



● 2001. 3. 제1심 합의관할 기준 소가 5,000만 원 → 1억 원 상향¹⁰²⁾

- 구 사물관할 규칙(대법원규칙 제1693호, 시행 2001. 3. 1.) 제4조를 신설하여 소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고등법원이 계속 담당하도록 함
- 위 규정은 2008. 2. 개정되어(대법원규칙 제2163호, 시행 2008. 3. 1.), 소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고등법원이 담당하도록 함¹⁰³⁾
- 위 규정은 2010. 12. 13. 개정으로(대법원규칙 제2310호, 시행 2011. 1. 1.) 삭제되었고, 이후 고등법원은 소가 1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함

● 2015. 2. 제1심 합의관할 기준 소가 1억 원 → 2억 원 상향

- 구 사물관할 규칙(대법원규칙 제2584호, 시행 2015. 2. 13.) 제4조를 신설하여 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고등법원이 계속 담당하도록 함
- 위 규정은 2016. 9. 6. 개정으로(대법원규칙 제2674호, 시행 2016. 10. 1.) 삭제되었고, 이후 고등법원은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함

■ 설문조사 결과 역시 고등법원에서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 법관: 고등법원 관할 기준 소가 2억 원 유지(33.8%) / 소가 기준 상향(20.5%)
- 변호사: 고등법원 관할 기준 소가 2억 원 유지(36.0%) / 소가 기준 상향(21.9%)

■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물관할 규칙을 개정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되, 제도 시행 후 항소 사건 접수·처리건수의 변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추후 항소심 관할 기준 변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고등법원에서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 11인(만장일치)

■ 사물관할 규칙 제4조 신설안 검토

102) 제6면 참조.

103) 당시 고등법원의 사건처리 적체를 이유로 소가 기준을 상향함.



● 신설안

○ 사물관할 규칙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위 신설안 단서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부분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호에 대여금 청구 사건 등 단독사건 유형을 추가¹⁰⁴⁾할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의 관할 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예)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호에 “대여금청구 사건”을 추가하면, 위 단서에 의할 때 대여금청구 사건 중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전됨

● 그러나 위와 같이 항소심 관할이 이전되는 사건 수는 전체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 수의 1.4%¹⁰⁵⁾ 정도로 예상되어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사건들과 새로 규정되는 사건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정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장기적 방안] 원칙적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하는 방안

▣ 장기적으로, 항소심을 두고 있는 본래의 취지, 지방법원 항소부 제도의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을 원칙적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항소심 관할 배분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할 때도, 항소심을 원칙적

104) 제70, 71면 참조.

105) $12,184\text{건}(2019\text{년 고등법원 민사 접수건수}) \times 0.056(\text{단독관할로 추가 규정하는 대여금청구 사건,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대략적인 비율, 제70면 각주 95 내지 97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추출}) / 46,144\text{건}(2019\text{년 지방법원 항소부 민사 접수건수}) \times 100\% = 1.4\%$



고등법원 관할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응답 법관의 43.6%, 응답 변호사의 40.0%)

8. 기타 논의가 필요한 문제

가. 제1심 단독관할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인지 여부

■ 원칙적 소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 ⇨ 질적 분류 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에 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

■ [제1안]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 현행 사물관할 규칙 제2조와 같이 전국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사물관할 규정을 두는 방안
- 법원별 사물관할이 달라질 경우 지나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가령 사건이 이송되면서 사물관할이 달라질 수 있음), 국민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음

■ [제2안] 법원별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

- 사물관할 규칙 제2조에 제1심 단독관할 기준에 관한 법원별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각 법원의 사정에 맞게 제1심 단독관할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각 법원별 소가에 따른 사건 분포 차이로 인하여 소가 기준 상향의 효과 편차가 상당함. 따라서 지역별 물가와 문화 차이, 각 법원별 소가에 따른 사건 분포 등을 고려하여 각 법원이 자율적으로 재판부 숫자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 필요
 - 예를 들어, 소가 2억~4억 원 사건 비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5%인데 반하여, 전국 법원 평균은 32.3%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액 또는 비재산권 사건 비율이 높음
- 일본의 사례: 각 재판소별로 어떤 유형의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할 것



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¹⁰⁶⁾

■ **검토 - [제1안]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 법원별 사물관할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 기준을 원칙적으로 통일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별로 재정단독결정이나 재정합의결정을 이용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함

■ **제1심 단독관할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10인) / 반대(1인)

나. 시범실시 관련

■ **시범실시 여부**

- **[제1안] 시범실시 없이 전체 법원에 대해 단독관할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
 - 시범실시로 인하여 법원별 사물관할이 달라질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가령 사건이 이송되면서 사물관할이 달라질 수 있음), 국민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음
 - 2001. 3. 및 2015. 2. 사물관할 변경 시에도 시범실시 없이 즉시 시행한 바 있음
- **[제2안] 일부 법원에 대하여 단독관할 확대를 시범실시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전체 법원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
 -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므로,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사물관할의 변경은 법원 내·외부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므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검토 - [제1안] 시범실시 없이 전체 법원에 대해 단독관할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
 - 시범실시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 과거 사물관할 변경 시의 시행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범실시 없이 전체 법원에 대해 단독관할 확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06) 제15면 참조.



- 시범실시 필요 여부에 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반대 11인(만장일치)

- **시범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안**

- 단독관할 확대를 시범실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됨

- **[제1안] 사물관할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범실시에 대하여 정하는 방안**

- 예) 사물관할 규칙 부칙에 법원별로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시범실시

- **[제2안]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재정단독결정을 활용하는 방안**

- 예) 사물관할 규칙 개정 전에 일부 법원에서 일정 소가 이상의 사건에 대해 재정단독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범실시

-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소가 3억 5천만 원 이하 사건 중 일부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재정단독결정을 하고 있는바, 이를 참조할 수 있음

- **검토 - [제1안] 사물관할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범실시에 대하여 정하는 방안**

- 사물관할 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일부 법원에서 재정단독결정을 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고, 또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물관할 규칙에 시범실시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법관 배치 문제

- **관련 규정**

- 사건배당 예규 제4조의2(단독판사의 보임)
 - ② 법관 임용 전 법무관·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자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함



- 재판장으로서의 경험을 쌓는 것은 좋은 법관이 되는 데 필수적이므로, 배석판사 근무기간과 단독판사 보임기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 있음

라. 인력 조정 문제

▣ 개요

- 재판부 증설에 따른 참여관, 실무관, 보안관리대원 등의 증원이 필요함
 - 참여관: 승진대상자를 필요한 수만큼 법원주사보로 승진
 - 실무관, 보안관리대원: 필요한 수만큼 신규 임용
- 직원 증원이 어려울 경우 단독관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증설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15년 사물관할 변경에 따른 인력 조정례

- 2015. 2. 합의부 사물관할 소가 기준 2억 원 상향 ⇨ 재판부 총 증설 규모를 72개로 예상함
- 2015. 4. 기획재정부와 수시직제협의 ⇨ 6·7급 각 36명씩 총 72명 증원
- 2015년 9급 공채 시 30명, 2016년 9급 공채 시 12명의 직원 증원 ⇨ 2015년 하순경까지 실제 증설된 재판부가 24개인 점 고려

▣ 검토

- 2021. 하순경까지 사물관할 변경이 완료되면, 2022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와 수시직제협의 가능
- 2022. 7.경 9급 공채 시 사물관할 변경에 따른 직원 증원을 반영할 수 있음

마. 재판연구원 증원

- ▣ 장기적으로, 단독재판부에도 재판연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수를 증원할 필요성 있음



- ▣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타 의견으로 다수 제시되었음¹⁰⁷⁾
- ▣ 고액 단독(소가 2억 원 초과) 재판부에 부장판사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판연구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액 사건에 대한 심리의 충실성 제고 효과

바. 법정 및 조정실 확보

- ▣ 재판부 증설에 따른 법정 및 조정실 확보가 필요함
- ▣ 각급 법원별 법정 및 조정실 과부족 현황을 파악하여 재판부 증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아래 법원별 재판부 증설 예측 표 참조)

[합의관할 기준 소가 5억 원으로 인상 시 실질재판부 수 변동 예측]

| 법원 | | 2019년 합의사건 (건) = A | 2억~5억 사건(건) = B | 합의사건 감소율(%) = C ¹⁰⁸⁾ | 합의부수 (개) = D | 감축 합의부수(개) = E ¹⁰⁹⁾ | 단독법관 증가(명) = F ¹¹⁰⁾ | 재판부 증설효과(개) = G ¹¹¹⁾ |
|------|----|--------------------------|-----------------------|---------------------------------------|-----------------|--------------------------------------|--------------------------------------|---------------------------------------|
| 서울중앙 | | 10,018 | 4,272 | 34.9 | 31 | 9.9 | 29.8 | 19.8 |
| 서울동부 | | 1,836 | 872 | 38.9 | 3.8 | 1.2 | 3.6 | 2.4 |
| 서울남부 | | 1,880 | 872 | 38.0 | 4 | 1.3 | 3.8 | 2.6 |
| 서울북부 | | 1,064 | 540 | 41.6 | 2.5 | 0.8 | 2.4 | 1.6 |
| 서울서부 | | 1,297 | 540 | 34.1 | 3 | 1.0 | 2.9 | 1.9 |
| 의정부 | 본원 | 1,237 | 614 | 40.6 | 2.6 | 0.8 | 2.5 | 1.7 |
| | 지원 | 963 | 481 | 40.9 | 1.88 | 0.6 | 1.8 | 1.2 |
| | 합계 | 2,200 | 1,095 | 40.8 | 4.48 | 1.4 | 4.3 | 2.9 |
| 인천 | 본원 | 1,860 | 932 | 41.0 | 4 | 1.3 | 3.8 | 2.6 |
| | 지원 | 660 | 306 | 38.0 | 1.4 | 0.4 | 1.3 | 0.9 |
| | 합계 | 2,520 | 1,238 | 40.2 | 5.4 | 1.7 | 5.2 | 3.5 |
| 수원 | 본원 | 2,394 | 1,211 | 41.4 | 6 | 1.9 | 5.8 | 3.8 |
| | 지원 | 4,043 | 1,873 | 37.9 | 8.07 | 2.6 | 7.7 | 5.2 |
| | 합계 | 6,437 | 3,084 | 39.2 | 14.07 | 4.5 | 13.5 | 9.0 |

107) 제39, 40면 참조.

108) $C = B/A \times 0.819$ (제58, 59면 참조).

109) $E = D \times 0.320$ (제60면 참조).



| | | | | | | | | |
|----|----|--------|--------|------|---------|------|-------|------|
| 춘천 | 본원 | 220 | 102 | 38.0 | 0.55 | 0.2 | 0.5 | 0.4 |
| | 지원 | 527 | 248 | 38.6 | 1.65 | 0.5 | 1.6 | 1.1 |
| | 합계 | 747 | 350 | 38.4 | 2.2 | 0.7 | 2.1 | 1.4 |
| 대전 | 본원 | 1,233 | 571 | 37.9 | 2.5 | 0.8 | 2.4 | 1.6 |
| | 지원 | 1,073 | 480 | 36.6 | 2.476 | 0.8 | 2.4 | 1.6 |
| | 합계 | 2,306 | 1,051 | 37.3 | 4.976 | 1.6 | 4.8 | 3.2 |
| 청주 | 본원 | 542 | 245 | 37.0 | 1.4 | 0.4 | 1.3 | 0.9 |
| | 지원 | 271 | 136 | 41.1 | 0.736 | 0.2 | 0.7 | 0.5 |
| | 합계 | 813 | 381 | 38.4 | 2.136 | 0.7 | 2.1 | 1.4 |
| 대구 | 본원 | 1,522 | 758 | 40.8 | 4 | 1.3 | 3.8 | 2.6 |
| | 지원 | 1,356 | 625 | 37.8 | 4.12 | 1.3 | 4.0 | 2.6 |
| | 합계 | 2,878 | 1,383 | 39.4 | 8.12 | 2.6 | 7.8 | 5.2 |
| 부산 | 본원 | 1,462 | 685 | 38.4 | 3.95 | 1.3 | 3.8 | 2.5 |
| | 지원 | 1,570 | 845 | 44.1 | 2.22 | 0.7 | 2.1 | 1.4 |
| | 합계 | 3,032 | 1,530 | 41.4 | 6.17 | 2.0 | 5.9 | 3.9 |
| 울산 | | 982 | 487 | 40.6 | 1.87 | 0.6 | 1.8 | 1.2 |
| 창원 | 본원 | 867 | 374 | 35.3 | 2 | 0.6 | 1.9 | 1.3 |
| | 지원 | 973 | 361 | 30.4 | 2.154 | 0.7 | 2.1 | 1.4 |
| | 합계 | 1,840 | 735 | 32.7 | 4.154 | 1.3 | 4.0 | 2.7 |
| 광주 | 본원 | 1,235 | 592 | 39.2 | 2.8 | 0.9 | 2.7 | 1.8 |
| | 지원 | 634 | 286 | 36.9 | 1.867 | 0.6 | 1.8 | 1.2 |
| | 합계 | 1,869 | 878 | 38.5 | 4.667 | 1.5 | 4.5 | 3.0 |
| 전주 | 본원 | 543 | 250 | 37.7 | 1.5 | 0.5 | 1.4 | 1.0 |
| | 지원 | 331 | 160 | 39.6 | 1.57 | 0.5 | 1.5 | 1.0 |
| | 합계 | 874 | 410 | 38.4 | 3.07 | 1.0 | 2.9 | 2.0 |
| 제주 | | 573 | 285 | 40.7 | 0.95 | 0.3 | 0.9 | 0.6 |
| 합계 | | 43,384 | 20,040 | 37.8 | 107.103 | 34.3 | 102.8 | 68.5 |

사. 단독사건에서 비변호사 소송대리의 허용 기준

■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110) $F = E \times 3$.

111) $G = F - E$.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 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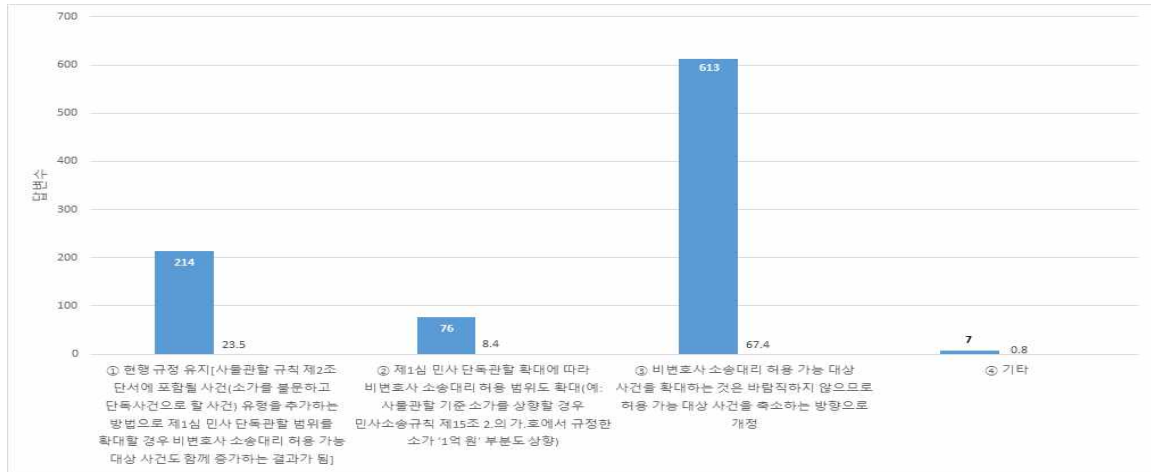
■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에 단독관할 사건을 추가할 경우 위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설문조사 결과

[법관]¹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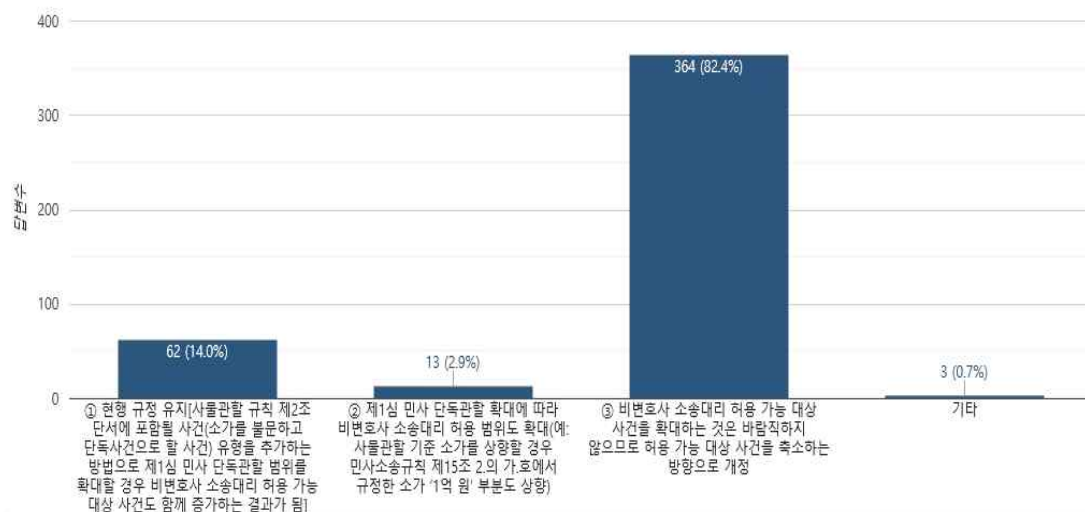
- ① 현행 규정 유지[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에 포함될 사건(소가를 불문하고 단독사건으로 할 사건) 유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범위를 확대할 경우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가능 대상 사건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가 됨] (214, 23.5%)
- ②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라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범위도 확대(예: 사물관할 기준 소가를 상향할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2.의 가.호에서 규정한 소가 ‘1억 원’ 부분도 상향) (76, 8.4%)
- ③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가능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허용 가능 대상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 (613, 67.4%)
- ④ 기타 (7, 0.8%)
- 현재 규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112)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10명.



[변호사]

- ① 현행 규정 유지[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에 포함될 사건(소가를 불문하고 단독사건으로 할 사건) 유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범위를 확대할 경우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가능 대상 사건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가 됨] (62, 14.0%)
- ②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라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범위도 확대(예: 사물관할 기준 소가를 상향할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2.의 가.호에서 규정한 소가 '1억 원' 부분도 상향) (13, 2.9%)
- ③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가능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허용 가능 대상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 (364, 82.4%)
- ④ 기타 (3, 0.7%)
 -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금지해야 함





■ 설문조사 결과 응답 법관의 67.4%, 변호사의 82.4%가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

■ 충실한 심리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하여 제1심 단독관할이 확대되더라도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범위는 축소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정비 필요

■ 단독사건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기준 확대 여부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반대 11인(판장일치)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개정안

[개정 전]

○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 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개정안]

○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 원 이하인 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에 대여금청구 사건 등을 추가로 규정할 경우¹¹³⁾, 위 개정 전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113) 제70, 71면 참조.



에 정한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범위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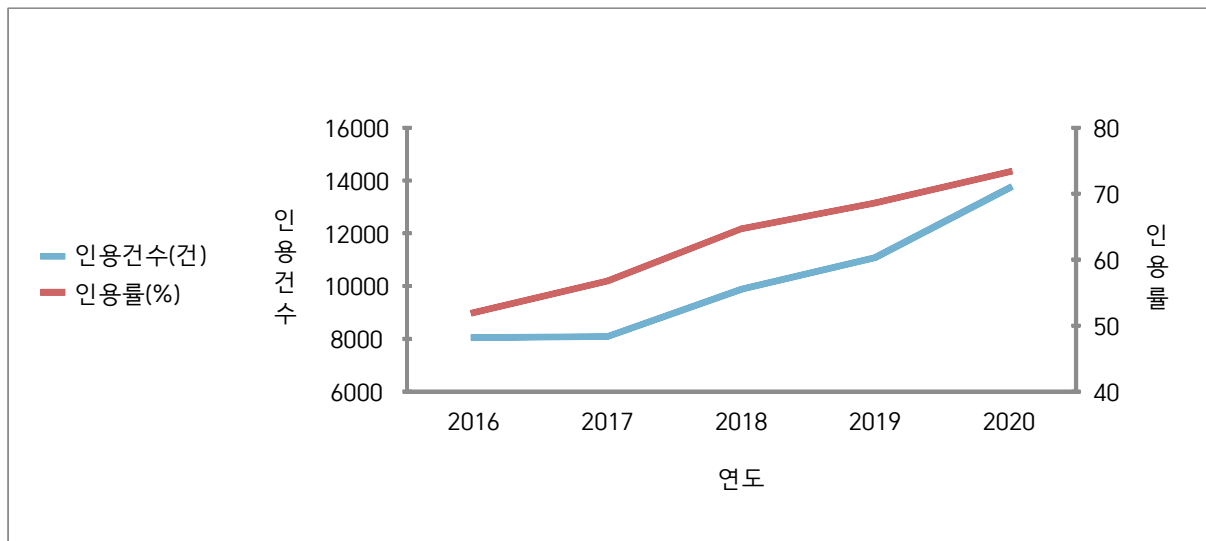
● 개정안 ⇨ 위 개정 전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삭제

- 모법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가와 무관하게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위 개정 전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음
- 법관 및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충실한 심리 등을 위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음(응답 법관의 67.4%, 변호사의 82.4%)

● 추가적으로,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 방식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표현을 간명하게 수정함

● 보완 방안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소송구조 제도 활용 현황]



아. 소액사건 소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

▣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단독/합의 사건의 비중(2014-2019)



[전국 법원 소액/단독/합의사건 접수건수(지원 포함)]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¹¹⁴⁾ | 2018년 | 2019년 |
|------|-------------------------------------|--------------------|--------------------|-----------------------|--------------------|--------------------|
| 소액사건 | 798,215 (70.1% ¹¹⁵⁾) | 702,273 (69.6%) | 686,407 (70.5%) | 774,440 (76.2%) | 708,760 (74.1%) | 681,576 (72.2%) |
| 단독사건 | 276,667 (24.3%) | 262,099 (26.0%) | 246,043 (25.3%) | 199,500 (19.6%) | 204,297 (21.3%) | 215,907 (22.8%) |
| 합의사건 | 61,557 (5.4%) | 41,579 (4.1%) | 37,974 (3.9%) | 39,853 (3.9%) | 40,755 (4.2%) | 43,384 (4.6%) |
| 합계 | 1,138,453 | 1,007,966 | 972,440 | 1,015,810 | 955,830 | 942,886 |

■ 언론보도 - 법률신문 2021. 8. 12.자 기사

- “민사사건의 70%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1856>

■ 전국법관 간담회 및 설문조사 의견

- 전국법관 간담회: 소액사건 중 쟁점이 복잡하고 다투는 사건에 대한 이유의 요지 기재를 권고하거나 강제할 필요 있다는 의견 제시
- 단독관할 확대에 관한 변호사 설문조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경우 소액 사건 관할범위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검토

- 소액사건의 소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 이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소액사건 소가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2000만 원 초과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 소액사건 기준 금액 하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 6인 / 반대 5인

114) 2017. 1. 소액사건 사물관할 조정(소가 2,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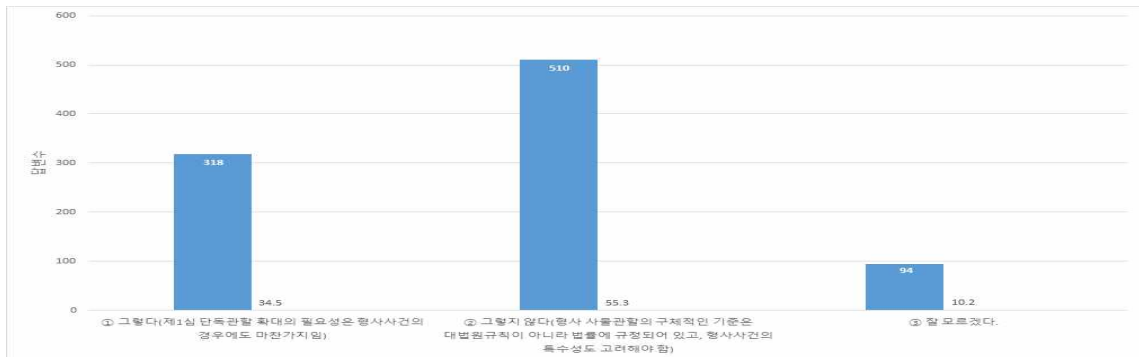
115) 해당 연도 민사사건 전체 접수건수에 대한 비율(소수 첫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자. 형사 단독관할 확대

▣ 형사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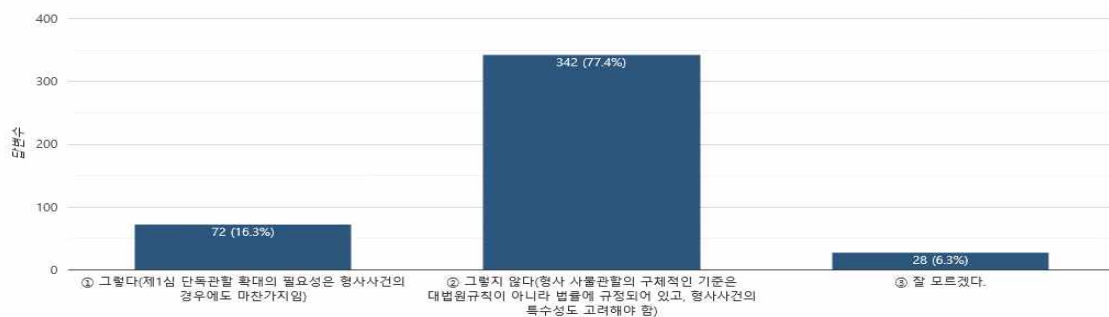
[법관]¹¹⁶⁾

- ① 그렇다(제1심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18, 34.5%)
- ② 그렇지 않다(형사 사물관할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함) (510, 55.3%)
- ③ 잘 모르겠다. (94, 10.2%)



[변호사]

- ① 그렇다(제1심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72, 16.3%)
- ② 그렇지 않다(형사 사물관할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함) (342, 77.4%)
- ③ 잘 모르겠다. (28, 6.3%)



116)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해당 문항 응답자 922명.



- ▣ 형사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법관의 55.3%, 변호사의 77.4%가 반대 의견을 제시 ⇨ 별도의 주제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차. 정책연구용역 및 공청회 실시 검토

- ▣ 장기적 방안으로 사물관할의 질적 분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 6인 / 반대 5인
- ▣ 사물관할 기준 개정에 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위원회 표결 결과** ⇨ 찬성 6인 / 반대 5인

카. 구체적인 시행시기

- ▣ 시범실시 여부, 인력 조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결정

타. 관련 규정 개정

- ▣ 앞서 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규칙»,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별지 참조)



[별지]

관련 규정 개정안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대여금청구 사건

5. 주택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사건

6. 금융기관이 피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7.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 |
|-----------------|--|
| 신설 규정 | <p><u>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u></p> <p><u>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u></p> <p><u>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u></p> |

2. 민사소송규칙

|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
|--|--|
| <p>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p> <p>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p> <p>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p> <p>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p> <p>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p> | <p>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p> <p><u>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 원 이하인 소송사건</u></p> <p><u>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u></p> |



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제13조(사건배당 확정 후의 재정합의·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 |
|--|---|
| <p>④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2. 단독으로 심리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 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p>⑤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5조 제2항의 회부에 관하여 불결정을 한 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p> <p>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결과("재정합의 | <p>④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2. 단독으로 심리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 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p>3.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때</p> <p>⑤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제3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5조 제2항의 회부에 관하여 불결정을 한 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p> <p>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 제3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결과("재정합의 |



| | |
|--|--|
| <p>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라고 표시)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p> <p>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 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접수·배당하고, 그 기록을 새로 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한다.</p> <p>3.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기록표지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p> | <p>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라고 표시)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p> <p>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 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접수·배당하고, 그 기록을 새로 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한다.</p> <p>3.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기록표지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p> |
|--|--|